

< 표 > 일부 미군 철수지 토양오염 실태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 지점수	시료채취 깊이(cm)	유류 (검출 여부)	Cd (mg/kg)	Pb (mg/kg)	pH
Camp Isbell (서울 성동구)	유류저장 시설로부터 5m 이내	2	표토	경질유	0.34-0.40	17.43-38.75	6.7-7.9
			50	경질유	0.30-0.32	2.71-9.13	6.9-7.5
			100	경질유	0.25-0.28	2.30-3.64	7.1-7.2
	유류저장 시설로부터 20m	1	표토	경질유	0.64	55.90	7.8
			50	경질유	0.35	7.44	8.0
			100	경질유	0.31	6.52	7.9
	유류저장 시설로부터 50m	1	표토	경질유	0.46	30.57	8.1
			50	경질유+중질유	0.13	2.83	7.5
			100	경질유+중질유	0.26	1.97	7.4
Camp Libby (경북 포항)	유류저장 시설 인근	7	표토	경유	0.34-0.77	4.63-74.85	4.8-6.0
			50	경질유	0.27-0.84	1.28-21.17	3.5-5.8
	10-20m	6	표토	N.D-중질유	0.27-0.73	1.24-143.05	4.2-7.1
			100	N.D-경질유	0.25-0.42	1.34-6.54	4.5-5.9
			200	N.D-중질유	0.25-1.00	1.50-3.52	4.3-5.7
			유류저장시설인근	2	표토	N.D	0.24-0.31
Camp Ames (대전 대덕구)	5m	1	표토	경질유	0.24	2.33	7.7
			100	경질유	0.19	6.80	6.0
			200	경질유	0.19	6.14	6.3
	10m	3	표토	N.D	0.21-0.50	3.79-19.83	6.1-7.0
			100	N.D	0.17-0.32	1.86-5.65	6.4-7.0
			200	N.D	0.13-0.17	2.63-3.88	6.4-7.0
	100m	1	표토	N.D	0.49	36.11	7.3
			100	N.D	0.24	10.72	6.9
			200	N.D	0.19	2.00	6.9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1993. 12), 『미군철수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 N.D : Not Detected (불검출).

* 일반지역 : 1991, 1992년 토양오염측정망 조사지점 중 주민건강 조사지역, 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기준으로 한 지역(유류 : 불검출, Cd : 0.149, Pb : 5.963).

SOFA)의 피해보상 절차를 이유로 현재까지 보상을 미루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방부와 미군, 행정기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피해조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뒤 이를 근거로 시급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정작 국방부에서는 건의서에 대한 회신조차 보내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 공군기지는 상습적인 환경오염 기지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3년에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흘러보내 근처 황구지천의 물고기가 떼죽음당하고 20ha의 주변 농지가 오염되었으며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1993년 3월 주한 미7공군사령부와 송탄시청, 평택군청 등은 K-55 미공군기지가 하수정화시설 용량이 부족해 하루에 발생하는 오·폐수 5천여 가운데 3천4백만 처리하고 나머지 1천6백여은 정화하지 않은 채 황구지천으로 그대로 흘러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평택군청은 주민들의 항의에 1992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대 안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수거해 수질오염도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 모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각각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1백12ppm과 1백22ppm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시정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됐다. 평택군청은 미군쪽의 폐수방류를

단속하려 해도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단속이나 국내 법 적용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치외법권 지대임을 확인했을 뿐이다.

미군쪽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쪽이 단속이나 처벌법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시설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대담당자는 “영구히 한국에 주둔하는 것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화시설 추가설치비용 1백20억원을 한국쪽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2월 민주당의 임복진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K-55기지의 오염실태와 함께 미군부대 레이더기지에서 변압기 등 전기장비의 절연체로 쓰이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이 1천 가량 폐기돼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1995년 들어서도 평택평야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



미군기지 철수운동은 환경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미관계 전반의 불평등을 상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상호평등주의 아래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국내 환경법규의 준수, 우리측 요구에 따른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실태 자료 제공과 필요할 경우 한미양국의 공동조사 실시, 기지반환시 오염지역 원상회복과 보상의 의무화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들이 K-55기지에서 매일 수천의 하수를 그대로 진 위천을 통해 인공담수호인 아산호로 흘려보내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이 부대의 생활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백pp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5년 4월 군산시는 군산시 미 공군기지의 수질 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1994년 10월 군산 미군기지내 2~3곳의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거,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2백 80ppm, 화학적산소요구량은 3백ppm으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하루 평균 4천여의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약이 살포되는 기지 내 골프장을 비롯해 대규모 식당과 병원 등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가 군산 앞바다로 계속 방류되고 있다. 특히 기지 내에는 국내에서 폐기물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골프장을 비롯해 병원시설, 사진현상소, 세차장, 비행기 정비시설 등 각종 특정 폐기물 배출시설이 있어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하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미군측과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수질검사 결

과를 미군기지에 통보만 했을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염물질은 계속 배출되고 있다.

낙동강에서 2km 가량 떨어져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롤은 2개의 오·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용량이 작고 낡아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를 하루 수백씩 낙동강 지류인 동정천으로 흘려보내 몇년째 왜관 8, 9리 주민들의 농사를 망치게 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1백20개의 기지(지상군 1백개, 공군 18개, 해군 2개)를 두고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억평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3백억평의 0.33%나 되고 한국군 기지면적 2억5천만평의 25%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육군 2만6천5백여 명과 공군 9천7백여명 등 3만6천여명의 주한미군과 군 장비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 국토를 할취고 있는 것이다.

5.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면죄부 - 한미행정협정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묻혀 있던 미군기지 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지난 1992년 11월 30일 한국 등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실태를 보도하면서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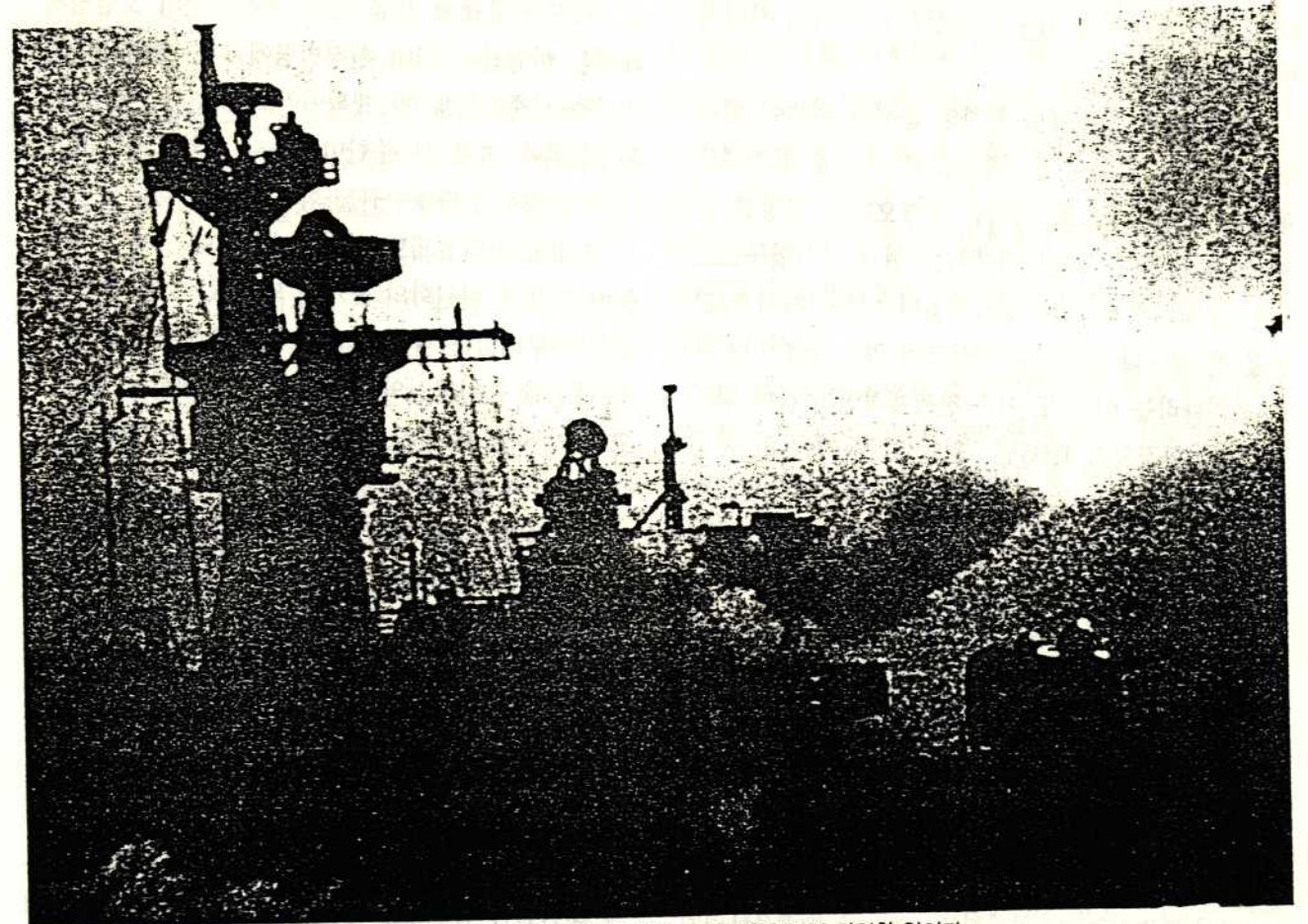
이 잡지는 미 의회 회계감사원이 지난 1991년 8월 하원 정부활동위 산하 환경·에너지·천연자원소위에 제출한 「독성 폐기물 : 해외 군기지들 계속 문제 드러내」란 제목의 52쪽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 미군 기지와 주변의 토양, 강물, 지하수, 항구 등이 맹독성 화학폐기물로 엄청나게 오염됐다고 폭로한 뒤 제트 연료, 폐유, 유기용제, PCB, 산, 페인트폐기물, 살충제, 석면, 시안화물, 중금속 및 낡은 군수품 등 오염 폐기물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1991년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독일, 영국 및 이탈리아 등에 있는 10개 미군기지 모두가 환경법규를 위반했으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는 수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7개 기지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미군기지의 연료공급용 송유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에서도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역이 상당 부분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잡지는 미국 국방부의 해외기지 환경정화 비용은 유럽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의해 오염정화비용의 일부를 미국이 부담할 계획이지만 한국, 필리핀, 터키 등 개도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모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주둔국간의 개별 쌍무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의 미군기지 환경복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군사시설이나, 심지어 이전의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의 군사기지 정화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이전의



정복과 파괴를 목표로 하는 군사활동이 생존권 기반인 환경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미행정협정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소련을 위협하기 위한 핵기지의 역할을 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의 발진기지 역할을 해온 필리핀의 미군기지 철수지역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 손 치더라도 평화시 군사활동으로 국토를 훼손해오던다는 불가피성으로 이러한 환경오염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지역에 대해 정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이나 예산조차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 보도 이후 전세계적인 여론에 힘입어 당시 환경처가 1993년 5월 전국 각지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행정협정 합동위원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외무부를 통해 미국측에 요청했고, 7월 16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측이 합의하여 8월 11일 환경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 환경분과위원회는 환경처 정책조정과장과 주한미군 공병참모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외무부, 국방부, 내무부 관계관 등 한국측 11명과 주한미군 환경관계관 9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환경처는 이 위원회를 통해 양국 환경관련법

령과 중장기 환경개선계획 등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주한미군 탄약상자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 PCB, 병커C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오·폐수 배출문제 등을 논의, 주한미군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국내 환경법령에 따른 환경기준을 미군측이 준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야흐로 환경문제에 관한 한 주한미군측의 치외법권적 횡포를 막고 정부가 환경주권을 회복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분과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이 터무니없는 불평등 협정이기 때문이다. 미군범죄 예방이나 한국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국토의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관계 전반의 불평등을 상징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치외법권을 넘어 면죄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 4조 1항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군의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다, 공무나 아니냐의 판단 자체를 주한미군 당국에 맡겨두고 있어 명백한 오염행위도 공무라고 우기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실정이다(합의의사록 22조 3항).

게다가 현재 환경분과위원회의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역할을 양국 정부에 대한 ‘권고’나 ‘조언’으로 제한하고 있고, 한미합동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특정의 환경문제밖에 다룰 수 없으며, 협의 내용도 한미합동위원회의 사전합의 없이는 언론에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폐쇄적으로 되어 있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니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 아래 구성된 환경분과위원회는 그나마 1993년 10월에 있었던 상견례 이후 이렇다 할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저 자세는 우리나라가 1950년 이후 미군이 쓰고 있는 기지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 비용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한미행정협정 6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 사업과 용역(전기, 통신, 하수오물 처리 등을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한미군의 뒷차거리를 한국 정부가 떠맡도록 하는 조항까지 있으니, 미국은 미군기지의 환경정화시설 설치비용을 방위비 부담 차원에서 한국측이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다.

협정 7조에는 미군이 한국의 법령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세계의 어느 주둔국에서도 국내 법령은 커녕 미국의 법령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우리가 할 일

정치적·군사적인 국토의 통일은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통일된 땅이 지나간 미군기지의 쓰레기로 온통 뒤덮여 있다면, 그 땅에서 우리는 건강한 통일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통일의 준비는 분단으로 얼룩진 이 땅의 쓰레기를 치우고 분단 이전의 자연상태로 땅을 회복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자존심과 주권 의식, 환경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정부에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불평등 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은 주권과 인권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과 맺은 주둔군지위협정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상호평등주의 아래 개정되어야 한다. 환경관련조항으로는 국내 법규를 준수할 것과, 우리측 요구에 따라 기지내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미국의 기지반환시 오염지역 원상회복 및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주권(인권, 범죄 예방)으로부터의 자국민 보호보다 더욱 근본적인, 후세에 물려줄 생태계와 국토의 보존 책무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어마어마한 환경복구비용의 확보 또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환경복구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은 환경문제 해결의 상식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자주의식에 힘입어 정부가 자주적인 자세로 미국에 강력히 요청할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양국 정부가 이런 일련의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환경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와 군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민중들의 강한 압력이다.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끊임없이 요구할 때 전반적인 군기지의 환경파괴 상황과 오염현황도 조사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정에서는 전례없는 판결이 있었다. 경북에 사는 김중윤씨가 미 해군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GREAT ARMY, GREAT FATHER)

-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와 매춘 -

안 일 순

1

나는 지금 극동의 작은 나라, 남쪽 코리아에서 미국군대에 의해 버려진 가난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위대한 미국, 위대한 아메리카 군대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핵무기, 미사일과 함께 들어와 근 50여년 동안 주둔하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철록속에 파묻혀진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시도 아닌 평화시대에 군대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 사기, 살인 등의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어째서 그토록 오랜시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 미국군대는 코리아에서 어떠한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매춘과 범죄와 추행과 인권유린이 면죄받을 수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 자리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남자와 여성을 다같이 타락시키는 매춘에 대하여, 탐욕가득한 군국주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와 인권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싶다.

2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와 매춘, 그 오십년의 역사를 어떻게 50분 안에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먼저 미국군인에 의한 매춘여성의 살해사건을 통하여 미국군대와 군국주의, 약소국여성의 경제상황, 미국군대와 한국정부의 암묵적인 묵인으로 인한 군대창녀의 존재, 미국군인들의 아시아 여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난 1992년 10월 28일 한국의 휴전선 가까이 미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시 보산동 한 방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발견당시 죽은 윤금이씨의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극부밖으로는 펩시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최로 만든 우산대가 항문에서 식도까지 27센티가량 꽂혀 있었으며, 온몸에는 피멍과 타박상을 입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으며, 한국법정에 미군을 세우는 등 매우 이례적이고 화려한(?) 사건이 되었다. 미국군대는 이 사건을 감추려고 하였고 보상해주고 빨리 끝내려고만 하였다. 그 이전의 미군들에 의한 범죄 특히 매춘여성들의 살해사건은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범죄는 은폐되어 왔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올바른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나마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끊임없는 항의시위와 여론에 떠밀려서 미국군인을 한국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이며, 현재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자주의식에 힘입어 정부가 자주적인 자세로 미국에 강력히 요청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양국 정부가 이런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환경에 대한 양국 정부와 군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민중들의 강한 압력이다.

을 상대로 4년여의 공방 끝에 19만달러의 피해보상을 받아낸 것이다. 팀 스피리트 훈련 중 미해군 함정이 망쳐놓은 어망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미군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미국 법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 준 좋은 예이다.

일본에서도 지난 5월 14일에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 23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원과 평화주의자들의 주도로 1만7천여명이 오키나와현의 미 공군기지 앞에서 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1987년과 1990년에 이어 세번째로 지노완의 푸텐마 미공군기지 주변에서 14km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어 기지 폐쇄와 토지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최근 부산에서 '우리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돼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무상 점용해온 부산항 8부두의 미군 전용부두와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부산진구 연지동 7관구사령부(일명 하야리아부대) 등 부산지역 3개 미군시설 26만여평의 즉각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 진정한 주권 회복의 장을 연 것은 이와 관련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미군기지의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궁극적인 역할은 바로 우리 국민들 몫이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복원·건설하는 데 있어 직접 이

해당사자이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사회적·신체적 희생을 극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모두가 환경주권을 부여받을 때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한걸음 더 가까이 오는 것이다. 분단의 철책이 걷힌 후에도 파괴된 환경은 분단의 오랜 유산으로 남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

□ 주

- 1) 한미행정협정(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약어로서 1966년 7월 9일 서울 중앙청 홀에서 한국측 대표인 이동원 당시 외무부 장관, 민복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미국측 대표인 러스크 당시 국무장관, 브라운 주한미대사관에 정식 조인된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1967년 2월 9일자로 발효되었다.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에 근거한 이 협정은 전문 및 31개조로 된 협정과 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와 20개항의 양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재판권 관할문제와 주한미군 용역단의 노무관계조항, 출입국 미군에 대한 검역의무화 문제 등은 1991년 2월의 부분개정 후에도 많은 불평등 요소를 지니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지난 수십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살인, 강간, 강도, 폭력, 마약, 밀수, 사기, 교통사고, 암거래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한국정부가 지난 1988년 국회에서 밝힌 미군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이라는 자료에 보면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여년간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39,452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수는 무려 45,183명에 이르며 이는 미군이 하루에 5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러한 미군범죄는 주둔지역인 기지 주변의 매춘골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3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미군들의 범죄는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국은 미군들의 범죄천국이 될 수 밖에 없었는가? 가난하여 팔 것이라곤 자기 몸밖에 없는 밀바닥여자의 인권은 성의 도구로 사용되고 버려지고 죽임당해도 좋다는 말인가? 미군상대의 매춘여성들은 주둔 군인들을 위한 성적 서비스 일회용품일뿐,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인가?

이같이 끊이지 않는 사건발생의 원인은 첫째,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방조해온 미국정부와 군부의 태도에 있다. 한국인을 죽여도 감봉, 본국소환, 강등 등 가벼운 징계에서 끝내버리는 미국군대는 군인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는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좀더 깊은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관계, 군사적인 유착, 미국군대 주둔의 역사적 배경속에서 배태된 현상임을 알수 있다. 오랜시간동안 미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고 일종의 금기시 되어온데에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한다. 수십년간 한국에서는 미군들의 치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반미요, 반미는 곧 용공, 반정부운동으로 몰아부쳐졌기 때문이었다.

4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민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미국과 미국군대는 비단 기지촌 주변의 여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전체, 한국인 속속들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거대한 대민국이다. 미국 만큼 한국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 초강력 파워를 가진 슈퍼맨의 나라, 야누스의 나라도 드물 것이다.

미국은 50년전 일본군인들이 물러가고 해방군으로서 환영받으며 한국땅에 발을 밟았지만 그들은 점령군으로서 행동을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위해 피흘린 나라, 도와준 나라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분단의 씨앗을 심은 장본이기도 하다. 3) 또한 미국은 전후에 원조물자를 제공한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자립을 막고 대미경제 종속을 심화시킨 기초역할이 되기도 했다. 4)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 전쟁의 안전핀이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서도 인식되기도 한다.

미국은 스스로 '자유를 수호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무서운 북한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혈맹이라고 하지만, 반면에 한국땅 전체가 불바다에 휩싸일정도로 핵무기를 배치하기도 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팔지 못해 어거지로 갖다 안기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의 사도이기도 하다. 5)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체는 역대 독재권력의 수호자요, 그들의 우방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 미국의 국익에 발맞추어 미국의 자본과 상품을 충실히 받아들여만 준다면 진정한 대다수 한국민중의 지지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은 친미정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이 미국은 '두얼굴을 한 사나이'로서,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반도를 핵전쟁화 하겠다는 동시 다

발 보복전략을 세우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시장을 보호한 채 한국시장의 무제한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직후 제공된 경제원조는 소비재중심의 원조였고 준군사적 원조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립적 경제구조의 형성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이후 대미경제종속의 기초가 되었다. 그후 미국자본의 한반도 진출은 1962년 이래 합작투자에서 시작되어 걸프, 유니온, 포드, 칼텍스, 지엠사등 미국의 굴지 기업들이 석유화학 비료, 금속, 기계 등 중 기간 산업에 참여하였다. 미국자본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자본 중 일본과 더불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군인에 의한 한국여성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한국의 군사관계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항구적 분단의 가능성을 열게 하였고 한국의 대미종속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쟁을 계기로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국에게 양도되었고, 또 전쟁재발방지라는 명분하에 1949년 철수했던 미국이 계속 주둔하게 된 것이다.

전후에 미국은 대소전기지로 위치지워진 한국에 대해 막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을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시켜왔다. 이러한 종속은 군수산업, 군사기술, 군수물자, 군사병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영역에 걸쳐있다.

또한 1966년 7월9일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한국군에서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주한미군에게 더욱 많은 편의가 제공되었다. 이렇게 하여 미군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지의 사용구역이 무제한으로 되고 미군범죄에 대한 제1차 재판권을 미국이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대미군사종속의 한예는 1978년 미하원군사위원회의 한보고서에 시사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훈련지역이라고 믿고 있다. 살아있는 적들이 바로 눈앞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기동훈련장과 광대한 자유사격장이 DMZ 이북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지않는 그리고 세금도 달라고 하지 않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미국기지 중의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45년부터 미군정기간을 거쳐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이후 유엔군의 일원으로 남한에 주둔해온 미군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결의한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군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군대가 북한의 위협을 막아준다는 것, 곧 북한과의 전쟁역지력으로서 인식되었고 주장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목적은 오로지 한국방위를 위해서인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오로지 한국을 위해 베푸는 시혜나 희생이 아님은 분명하다. 미국군대는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은 현재 총 37,000여 병력으로서 1백개의 부대에 흩어져 있는 육군병력(제8군)26,000여명과 18개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병력 1만여명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국방부요원 5,400명과 해군 및 행정지원요원 170여명이 주둔하고 있으나 전투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이들 주한미군 43,000여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땅의 총면적은 거의 일억평(7만3천 에이커)에 이른다. 이는 남한땅 전체(3백억 평)의 0.33%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는 동두천(보병 2사단), 의정부(한미야전군사령부), 서울(주한미군사령부), 오산(7공군사령부), 평택(23지원단), 대구(19지원사령부), 부산(34지원단), 진해(해군지원요원), 군산(8전술전투비행단)이 있다. 6) 이들 기지는 판문점의 유엔공동경비구역으로부터 제주도의 유격훈련장에 이르기까지 남한전역에 걸쳐있다. 세계적으로 군사기지수와 밀도가 한국처럼

많고 조밀한 곳은 없다.⁷⁾

더구나 이들 미군기지에는 핵탄두, 전술핵무기, 중성자탄, 랜스미사일 등이 비밀리에 설치되어 있어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전역이 무수한 핵무기로 뒤덮혀져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기지의 부지는 모두 국유지이며 무료로 사용된다. 주한미군의 전력의 실체와 각 지역별 특성은 본 강연에서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님으로 생략한다.

주한미군의 역사는 1945년 9월8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인천에 상륙한 미24군단 휘하의 2개 사단은 하지중장의 지휘아래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을 지배하는 점령군으로서 주둔하기 시작했다. 세계 제2차대전 전후 미국은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거대한 사회주의권의 부상과 팽창으로 대소전진기지를 담보해줄 강력한 친미, 반공정부가 필요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안보논리를 내세워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한국군은 미국의 원조로 5만에서 32만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후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탄생된 박정희정권 역시 친미, 반공을 기조로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은 대 중공고립정책을 위한 일본의 재무장과 안보의 필요에 따라 한일관계정상화를 우선했다.

특히 박정희정권 당시 한미군사관계의 종속은 베트남전쟁의 파병에서 더욱 극치를 이루었다.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던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와 달라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내의 반전무드는 반체제운동으로까지 진전되고 국제여론의 비난속에서 탈출구를 찾던 미국은 한국군대의 동원을 구상하게 된다.

1965년 존슨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박정희를 초청, 한일무역관계와 한국군의 월남파병에 대해 논의하였다. 존슨은 박정희에게 차관공여를 제의했으며, 한국내 미군병력의 현상유지, 헬리콥터 등 미군사무기의 원조를 약속하였다. 박정희 역시 월남파병을 통해서 미국의 지지강화를 기대하였고 한국군의 군사력의 증강과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차관의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1966년 5차대규모 파병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는데, 이것이 1966년 3월 브라운각서⁸⁾로서 그 내용은 한국군의 현대화와 장비개선, 한국경제의 월남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한국에 대한 차관의 증액 등 이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은 월남전 당시 인건비가 싼 한국군을 고용하여 파월군인의 봉급에서 많은 이득을 보았다.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을 대신하여 남의 나라 땅에서 죽어갔던 것이다.

그 이후 닉슨독트린, 카터를 거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일부철수와 대북한 접근 정책을 취하자 박정희의 반발적 대응책으로 자주국방 추구하고 대소련 접근 등을 가져와 70년대말 한미관계는 소위 불편한 관계를 맞게 되었다.

박·카터회담을 통해 이 관계는 풀리는 듯 했으나 결국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는 10·26으로 정리되고 말았다. 그 이후 군부세력의 쿠데타와 광주학살을 통한 제5공화국의 성립되자 1981년 전두환의 방미와 1983년 레이건의 방한을 통해서 한미관계는 다시 강화되어갔다. 전두환은 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미국의 승인으로 보완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군사쿠데타로 일어난 정권의 물리적 기반을 확보하려 하였던 것이다.

6

이러한 배경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와 그 군인의 매춘공간, 우리는 그 공간을 기지촌이라 부른다. 원래 기지촌이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주지와 상권을 일컫지만 대개는 미군들과의 성거래가 이루어지는 섹스시장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촌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45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였으나, 당시에는 기지촌 다운 기지촌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었다.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이 다시 오자 기지촌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술한 남편과 남자와,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홀몸이 되어 생활능력을 잃은 부녀자들뿐만 아니라 살길이 막연한 수많은 피난민들도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미군부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⁹⁾ 이렇게 시작된 기

지촌은 시대와 사회분위기에 따라 변모되어 갔지만 그속에서 한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군부와 미국과의 유착이 진행되면서 미국군인들을 위한 군대창녀촌인 기지촌이 양측에 의해 암묵적으로 묵인, 지원되고 관할,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동두천 주변에는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 소요산의 일명 몽키하우스, 부평에는 제인원 등의 성병수용소가 있었다. 이 수용소에는 미군을 상대로하는 여성들 중 성병에 걸려 불합격판정이 난 여성들을 검거하여 미군의관들이 직접 호스타시린 등 항생제를 맞추며 격리 강제수용하였다. 그것은 여성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 미군상대의 클럽 입구에는 클럽카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성병검진에 패스한 여성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미군들은 그 번호와 사진을 보고 여성을 고르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미군상대 관광홀에서 일하려면 의무적으로 월2회 성병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홀아가씨들 가운데 보군자가 많으면 OFF LIMIT(미군출입금지택지)를 부여 홀을 폐쇄시켜버리곤 하였다. 성병을 보군한 미군들은 처벌하지 않고 여성들만 강제수용하고 미군의관이 직접 항생제를 주며, 클럽을 강제폐쇄하는 일련의 행태는 오로지 미군들을 위해서 깨끗한 여자를 바친다는 미군을 위주로한 불평등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행정부처인 보건소의 관할과 미군부대의 개입하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해 놓고도 군대창녀집단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중간집단인 매춘클럽의 운영포주와 뺨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 더우기 미군들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성들의 성병검진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정작 보군자인 미군들은 놔두고 자국의 여성들만 처벌하는 성병관리의 이중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박정희정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미군들의 성욕배출을 위한 서비스를 다하였다. 예를 들면, 미군들을 상대로한 클럽에 면세혜택이라는 특별배려를 하여주었고, 관광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클럽주인들의 해외연수도 시켜주었다. 더 나아가 관변자치회를 두고 미군들과의 폭력사건 발생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였으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더구나 미군에 의해 매춘여성이 강간, 죽임,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수사 한번 제대로 못한채 미군측에 가해자를 넘겨주었다. 즉 양생시 하나때문에 한미관계를 해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설사 여론에 몰려 한국재판정에 미군을 세운다 하더라도 두명의 여성을 죽인 미군에게조차 '우방의 군인임을 참작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더구나 부끄럽게도 지방유지와 행정관리(군수급, 경찰요원)들은 이러한 여성들을 한달에 한번 강당에 모아놓고 '당신들은 애국자다. 우리를 지켜주러 온 미군들을 위안해주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다'라고 칭송하였던 것이다. 이는 군사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정부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군대창녀촌의 설립은 박정희정권 당시 조성된 군산의 아메리카타운을 들 수 있다. 이름조차 주식회사로 사장, 상무, 전무, 경비가 있는 회사체계, 다시말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군대창녀주식회사가 설립 된 것이었다.

타국에서의 지리하고도 무료한 군대생활과 성욕의 분출구를 찾고 있는 미군 그리고 군대의 통솔을 위해 미군들의 성욕을 통제조절해야 할 부담을 느끼고 있던 미군부대 당국 그리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와 주식회사 사장의 이윤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정권유지를 위해 미군의 주둔이 필요했던 독재정권, 이들의 이해관계 속에 실버타운이 건설되었고 그 적색지대(관청에 가면 도면에 적색으로 붉은 줄이 쳐져있다고 한다)로 한국의 가난한 계층의 여성들은 흘러왔다.

그녀들은 그녀들대로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각기 어두운 사연을 품고, 섹스산업으로 자석에 이끌리 듯 흘러흘러 적색선을 넘고 들어갔다. 아메리카 병사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여자장사, 술장사, 인육시장의 공간이 관과 자본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¹⁰⁾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비단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월남전시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들의 성폭력은 개인단위의 능욕보다는 집단난행(윤간)으로 나타났다. 참전 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녀를 그 가족과 마을사람들, 동료군인들 앞에서 끌어내어 욕을 보이는 행위, 질속에 자동유희유주입기를 박은 행위, 음모에 라이터로 불을 부친 행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잔혹한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군대와 성폭력의 또다른 양상은 군대창녀 곧 매춘사업의 증대로 나타났다. 수잔 브라운은 그의 책 『성폭력의 역사』 11)에서 사천여 병력에 섹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군대창녀의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1보병사단 제3여단의 기지 영내에 귀속되었던 라이테 오락지역(Recreation area)은 철조망을 쳐서 입구에 헌병이 보초를 서고 있는 1에이커 가량의 컴파운드였다. 이 지역은 보안 관계로 낮시간에만 개방되었다. 이 지역안에는 핫도그, 햄버거와 각종 기념품등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주된 매력의 대상이 되는 곳은 두개의 콘크리트 바라크였다. 이 바라크는 각기 약 1백피트의 길이로서 각 바라크는 두개의 빠와 밴드 스탠드 그리고 커튼을 친 60개의 작은 방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작은 방안에는 월남여인들이 살고 있었다. …… 한번 노는 데 미군병사들은 월남여성들에게 5백 피아스터를 지불했다.(미국돈으로 2불 해당) 나이 어린 소녀의 경우에는 한번 놀아준 대가로 2백 피아스터(75센트)를 받는다. …… 전쟁동안 자신의 집과 가족을 잃은 피난민들과 사이공 슬집등지에 있다가 물러나온 여자들이 군창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원이었다. 그들은 보통 성(星)지사로부터 돈을 받고 충원된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집된 여자들은 라이케 시장의 손을 거쳐 군창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다. 매춘부의 구입과 가격협정을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말김으로써 일손을 덜고 있는 미군당국은 매춘업의 보안관계 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있었다. 매춘부들은 매주 군의관들에게 진찰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군대창녀의 존재는 육군참모총장, 사이공주재 미국대사관, 미국국방성의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통제는 소령계급의 여단 지휘관하에 두어졌다고 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베트남 군대창녀의 설치가 미국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월남의 시장, 민간인, 미대사관, 미국방성 등의 손에 의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다. 흔히 중군위안부의 문제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와같이 베트남에서의 군대창녀제도의 설치와 한국에서의 기지촌의 존재는 양태만 다르지 그 성격과 본질, 설립동기, 성병관리, 운영 등에 있어서 유사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과 정신대는 전쟁기간 중의 일이었다.

미국은 군사력을 통한 대외정책을 통해 후진국의 독재권력과 기업이 협력하여 자국의 무기상인, 투자가들이 살찌었다. 월남의 포화와 연기속에서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더욱 호황을 맞았으며 무기를 팔아 미국의 부는 더욱 더 증대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군부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민주를 열망하는 남미와 제3세계 약소국 시민들을 살해하는 군사적 개입을 묵인하여 간접살해 하였고 말단병사들은 또 그들대로 포연이 가득한 전장터에서 또는 주둔국에서 가족과 생계수단을 잃은 가엾은 여인들의 성을 또한번 짓밟으며 전쟁의 죄책감을 잊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인, 파스아메리카나의 침병인 그들은 누구인가? 미군은 처음에는 징집병이었지만 베트남전쟁 후 지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인생활은 안정된 직업으로 교육도 받을수 있으며 계급도 올라가고 외국에 가면 수당도 따로 나온다. 잦은 범죄, 특히 최근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통하여 일부 한국인들에게 미군들의 모습은 성충동을 참을수 없는 '야수' 또는 마약과 술에 비틀대는 '변태성욕자' 오로지 여성을 섹스상대로 보는 '슛컷' 등으로 왜곡되게 비쳐진다.

주한미군의 범죄 45년사에서 미국군부에 의한 광주학살의 목인이라는 간접살해죄라는 가장큰

범죄가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미군 말단병사들에 의한 범죄사는 1947년 호남선열차내에서 부인들을 운간한 사건이래 헤아릴 수 없이 비밀비재하게 발생하였다.

주둔초기에 미군들의 총기난사는 수없이 자행되었다. 기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스스로없이 접근하는 한국인들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군용건을 풀었다. 여자들에 대한 강간과 윤간은 수없이 저질러졌다. 미군들은 길가는 여인들을 미군부대로 끌고가 집단적으로 윤간하고, 머리를 자르며 옷을 벗겨 온몸에 섹칠을 하는 등 갖은 짓을 다하였다. 그리고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폭행한 후 살해해 버리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이 중 신문에 보도된 것들 특히 여성에게 가한 강간살인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2)

- 1989. 6. 미공병대, 앤더슨로스, 플로이트로고트, 포장마차에 있던 이양을 여관으로 끌고가 폭행.
- 1989. 2.20. 군산기지, 윌슨상병, 한국인여자 2명에게 총구겨누며 희롱, 지나가던 윤춘호씨 향의하자 공기총 발사.
- 1986. 2. K-6기지 항공정비대대, 마이클 웨인 하멜, 평택 안정리, 목졸라죽임.
- 1986. 3. 미25사단포병대대, 귀가중이던 여성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 윤간.
- 1986. 임신육개월여교사, 틱스프리트 참가중인 미군병사 5,6명에게 윤간.
- 1980.11. 미육군 K-6기지부대 545 의무대, 셔링.G.데이비드, 목졸라죽임.
- 1977.10.12. 존 스토서, 최졸목걸이로 같이 자던 여인 죽임.
- 1977. 6. 미공군 1중대, 스티브알렌타워먼, 휘발유로 불질러죽임.
- 1977. 7. 미공군 1중대, 스티브알렌타워먼, 칼로 찔러죽임.
- 1970.10.24. 하야리아부대, 그린앤드슨상병과 리처드스, 데리상사등 3명이 지나가던 병어리치녀를 병영 창고에 데리고가 집단윤간.
- 1963. 5.11. 미 제36공병단 소속 로저스 일등병, 문정자 여인살해.
- 1964. 2. 4. 동두천 미군부대앞, 임신 9개월 여인 광풍잡다가 살해당함.

특히 주한미군의 마약복용은 종종 살인강간 등 끔직한 사건을 유발시켜왔다. 그러나 비단성범죄 뿐만이 아니다. 미군들은 APO(미군사우체국)등을 통하여 골프채, 녹용, 마약, 보석 등을 밀수하고 피엑스물품을 유출시켜 암거래를 공공연히 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교란시켜왔다. 밀수범죄는 대부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APO), 주한미군 출입국검사처(SOFA), PX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미 행정협정¹³⁾에 의해 한국정부가 미군에 대한 통관검사권 행사없음을 이용하여 막대한 양의 밀수가 행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미군의 밀수는 2,417건에 총 79억 7천 6백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일 뿐이고 실제 밀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아니라 폭행 교통사고로 인한 한국인들의 피해는 허다하다. 교통사고는 대개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난폭운전으로 피해자는 현장즉사 내지 중상을 입는다. 그러나 사고가 모두 공무중과실로 처리되어 미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구가 되거나 심한 후유증에 시달려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군대와 한국정부간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원인이 있고 불평등한 행정협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미군병사들의 자질 또한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더구나 그들은 '한국에는 여자값이 싸다'는 소문을 듣고 향락의 천국으로서¹⁴⁾ 일종의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한다.

미군들은 한국여성을 절대로 평등한 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러 왔지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나 '내가 너를 돈주고 클럽에서 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한국여성을 값싼 성상품으로서, 일회용 섹스상대자로 생각하며, 비즈니스결로서 깔보거나 경멸하고 있다.

한 예로 1977년 송탄지역에서는 미군들이 뿌린 유인물이 돌았다. 유인물의 내용은 가방, 신발 값 등과 더불어 여성들의 화대값을 인하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이었다. 소위 슛타임 5달러, 가방 5달러라고 새겨진 이 유인물을 보고 클럽가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상가의 한국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부대앞까지 몰려가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미군지도부는 항의하는 여자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응수하기도 하였다. 신발값과 한국여자의 몸값을 똑같이 하라는 미군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한국여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64년 10.군정 언스트 W 카스튼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들의 90%가 비도덕적 생활에 빠져있고 도박 즉시 그들은 밀매음의 구렁에 빠지며 성병과 마약에 탐닉하고 있다고 썼다. 미군군인들은 일과가 끝나면 대부분 오후에는 TV와 비디오, 주말에는 쇼핑과 운동 그리고 부대주변의 클럽가로 흘러나온다. 클럽에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싼값의 한국인 여자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 무분별한 성생활의 유혹에 빠지며 범죄와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미군들을 통하여 한국에 유입되는 저질 향락문화, 포르노 도색잡지들의 범람, 특히 에이즈 통로로서 미군들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병폐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는 무방비 상태로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에이즈의 발생률 중 65%가 미군상대의 여성에게서 나타났다.

그밖에 핵문제, 환경 파괴문제, 도시개발제한문제 등 미군군대로 인한 이루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지만 본강연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특히 매항리, 모슬포, 해미에는 주로 사격장이나 비행장을 배치하여 이를 전쟁연습장이나 전투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기지주변의 주민들은 어장, 집과 마을등 생존현장을 빼앗기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지촌에 흘러들어오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인가? 그리고 그곳의 매춘구조와 형태, 클럽의 임금구조, 중간조직, 자치회, 여성들의 정신적 경제적·육체적 상황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들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자한다.

그들의 유입동기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우선 전후 1950년대는 전쟁으로 파괴된 가정, 피난민, 고아 또는 전쟁과부, 미혼모 등 전쟁의 상처를 직간접으로 겪은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어떤 여성은 몸을 팔아 11식구를 먹여살리기도 하였고 고무다리, 외팔 등 전쟁으로 인한 불구자 심지어는 일제시대 정신대를 겪은 여인들이 먹고 살길이 막연해 다시 미군상대 매춘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하였다.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파행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을 겪었던 한국의 해방직후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특히 그나마 미미하던 산업조차 뿌리채 파괴된 전쟁은 여성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안겨 주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서도 일부 여성들은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더우기 한국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자본주의체제로 편입이 되고 자본의 적합작투자가 침투되면서 한국경제는 대외의존적인 구조로 자리를 잡아가다. 이는 한국 농촌의 피폐화를 낳았으며 농촌인구는 도시로 흘러들어 거대한 저임금 노동자층을 형성하였다. 도시로 유입된 대다수의 여성은 미혼의 저학력과 단순, 미숙련 노동분야에 집중고용되었다. 다국적기업은 이렇게 흘러든 값싼 한국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돈을 모았고 그돈은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어갔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은 단순 생산적 노동에 집약되어 있었으며 평균임금은 기본급 10만원선으로서 남성의 40%정도의 임금을 받았고 노동시간은 남성보다도 훨씬 길었다. 더구나 여성의 노동조건은 장시간 노동, 직업병, 철야, 야근 등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빈민여성들의 열악한 취업상황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거치면서 사회적 노동에서 이탈한 다양한 형태의 매춘에 종사하게 되었다. 기지촌으로 흘러들어오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러한 가난한 출신의 가정이거나 노동자의 딸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80, 90년대로 오면서도 한국은 대외의존적인 파행적인 경제구조의 취약성에서 기인한 향락산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매춘여성들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아메리카나이즈화한 사회, 물질적 가치관 등의 만연 등으로 국내매춘 산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하나의 환상을 안고 매춘시장의 종착역으로서 기지촌에 흘러들어 가게 된다.

한편 시대상황을 떠나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근친상간 또는 직장

상사, 애인, 윤간 등에 의한 강간경험은 여성들의 경제적 동기 못지않게 기지촌으로 등떠미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는 한국사회의 특이한 유교적 순결관과 맞물리면서 여성들의 의식속에 하나의 보이지않는 구속력을 갖게 하였다. 기지촌의 화대가 내국인 상대보다 높은 것도 아닌데 그 수가 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과거를 묻지않고 현재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미군들이 숙편해' 미군과의 결혼으로 한국을 떠나 과거를 깨끗히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 새생활을 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군과의 결혼도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동거를 할 때는 사랑운운하며 살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면 약속 위반한채 버려지기 일쑤이다. 혼혈아가 태어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아이로 인한 경제적 악조건에 놓이게 된다. 설사 결혼에 성공해 미국을 가는 경우라할지라도 언어, 생활습성의 차이 등으로 미군인 남편에게 구타와 술 등으로 학대당하다가 70-80% 이혼을 하며 이혼 후 미국생활에 적응을 못해 심지어 괄, 하와이, 맛사지팔러 등 술집으로 다시 유입되어 국제매매층으로 전락하는 예가 허다하다.

기지촌의 매춘구조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장기체류군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데에 있다. 대부분 클럽에서 만난 미군과 여성들은 계약을 맺고 동거에 들어가는데 이때 동거계약조건으로 한달생활비라는 명목의 돈을 지불한다. 물론 일회적인 슷타임, 롱타임도 있다. 또는 미군들의 훈련시 포주를 따라 훈련지역에 가서 군인들을 상대로한 담요부대가 있었고 최근까지 팀스프리트 훈련이 이루어지면 역시 전담포주를 따라 원정을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이 매대되는 경우는 클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미군과 여성은 클럽에서 서로 마음이 맞으면 동거계약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동거라는 이름하의 현지처 또는 계약결혼이라는 허울 좋은 매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이한 양태의 매춘은 기지촌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킨다. 매춘여성 스스로도 자신은 매춘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한가지 이러한 매춘의 특성으로 인하여 두사람 사이에 아이가 탄생되고 미군의 약속위반으로 버려진 여성의 경우 그녀는 양육책임을 자동적으로 떠맡게 된다. 혼자몸으로도 살기어려워 매춘에 나선 여자가 다시 아이의 양육책임까지 짊어지고 살아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짐작할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더욱더 악착같이 매춘에 매달려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기지촌의 또다른 문제, 버려지는 어린아이들, 혼혈아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혼혈아는 전쟁직후 약 3천여명이 미국으로 입양을 갔으며 현재 필벽재단을 통하여 일부 혼혈아들이 등록되어 있으나 전국의 혼혈아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되지 않고 있다. 혼혈아들은 대부분 기지촌 주변에 무책임하게 뿌려져 자라면서 '양공주새끼니 트기자식이니, 깡동이 녀석이니'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 특히 흑인계 혼혈아는 더욱 큰 갈등을 겪고 자라난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이민족에 대한 배타심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며 기지촌의 나쁜 환경속에 자라나면서 유흥가의 건달로 빠져 고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는 경우로 크게 나눌수 있다. 이들은 13살이 지나면 입양길도 막힌다. 심지어 한국민으로서 대접도 안해주어 군대도 면제된다. 더구나 이들은 어머니가 매춘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 또는 한국인 형제, 백인혼혈아인 형, 흑인혼혈아인 동생 등이 같이 한가족이 되어 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개중에는 성공한 혼혈아도 있지만 대개는 밤무대의 가수거나 아니면 스포츠계 등으로 나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을 가고 싶어하나 미국정부가 이들 혼혈아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도 아니다.

혼혈아들은 부모의 신분에서 따라 계층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안정된 부부의 자녀인 경우는 외국인 학교 등 군부대내의 교육기관에도 진학하고 미국에서 양육되기도 하고 해외 입양되어

자라기도 한다. 해외입양된 경우도 그다지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혼혈인으로 질시를 당하며 살지만 막상 미국에 가서는 미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생활방식의 차이로 또다시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혼혈아들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케이스는 어머니가 부양 능력이 없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편모라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타인종 특히 혼혈아에 대한 배타심은 매우 심하다. 이는 단일민족으로서 이민족에 대한 거부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이땅에서 주인노릇을 하는 미군들에 대한 표면화되지 않은 반감과 증오심의 작용도 있다. 혼혈아란 한국여성을 유린한 미제국주의 군인들이 무책임하게 뿌리고간 자식들이요, 그들의 존재자체를 민족의 수치로 생각하는 심정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회에서도 가장 손가락질 받는 가장 천한 매춘여성의 자식이기도 하기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미묘한 시선속에서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야한다. 더구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배신감으로 바뀌고 그 배신감은 다시 증오로 바뀌어 정신적 혼돈과 정서적 불안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어머니의 불안정한 생활과 정서에 영향을 받아 역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심한 자아정체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들의 절망은 외모로 인하여 취업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어떤 여자혼혈인의 경우는 어머니의 일을 대물림하여 같은 매춘의 길에 들어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삼대째 매춘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혼혈아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그들의 어머니에게 미군과의 매춘을 알선하고, 독려하며 '애국자'라 칭송한 한국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면 국익을 위해서 머나먼 타국에 군대를 주둔시킨 미국정부의 책임인가? 혼혈아들의 양육책임 이는 당연히 그 어머니의 나라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¹⁶⁾

여성에 대한 군인의 성폭력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유린이다. 특히 군인이라는 남자들의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하는 특별테러인 것이다. 물론 군대의 주된 목적은 살인과 파괴다. 주둔군인에 의해 발생하는 강간역시 정복자의 행위로서 허용되고 묵인되어왔다. 힘이 지배하는 강대국의 논리앞에서 미국병사들은 평소 감히 생각지 못한 집단의 힘에 의해 아메리카군대의 위세에 힘입어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들을 아무런 수치심이나 죄악감도 느끼지 않고 자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에서도 평화시에서도 군인에 의한 성폭력은 엄연히 국제조약에 유엔인권헌장에 범 죄적 행위로 불법화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의한 강간과 군대창녀의 허용은 어쩔수 없는 부작용으로 지속되어왔고 현재도 이러한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군대에 의한 강간과 매춘의 문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개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식민지 전쟁, 제국주의, 약소국과 강대국, 군대와 여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미국군대가 한국여성들에게 가하는 살인과 강간, 성폭력, 지속적인 매춘행위는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저지른 성범죄와 필리핀, 베트남에서 가한 성폭력들과 매춘사업 등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한 군인들의 항의가 있을 것이다. '여자는 자발적으로 몸을 팔러 들어왔고 나는 그 여자와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샀을 뿐이다' 라고. 그리고 '매춘과 강간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다! 강간이 강제행위에 의해서 여성의 성을 강탈하는 것이라면 매춘은 돈을 주고 여성의 성을 사는것이다. 그러나 강간과 매춘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일본인들은 정신대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선인 처녀들에게 당시에 '군표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또 주둔미군은 한국여성의 성을 사는 대신 '군표나 달러나 피엑스 물건을 주었다'고 말한다.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한 착취행위, 즉 군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희생자인 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즉 강간행위를 매춘행위로 전환시키려는 가해자의 교활한 의도가 그 이면에는 도사리

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기지촌 주변에서 성을 팔던 군대위안부들 역시 자의든 타의든 강대국의 군국주의, 자본주의, 냉전 그리고 가난과 역사의 수난기 속에서 희생된 여성들이다. 그들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들 개인의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 군국주의, 군대의 횡포에 대한 저항은 우리 여성들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약소국여성들의 문제로만 국한 되지 않는다. 전쟁과 군국주의, 군사문화는 모두에게 파괴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매매춘은 서로를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남녀 모두의 가정도 깨뜨린다. 그리고 매춘의 도시는 저 소들의 성이 그랬듯이 멸망과 저주만이 있을 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남한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휘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왔다면 왜 미군지도부는 학살을 허가하고 또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군대를 이탈하여 죄없는 여자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죽이는가?

이제 미국은 미국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오로지 한국을 위해서, 세계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라! 오로지 아메리카의 국익을 위해서라고 솔직히 말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주둔한다면 강대국으로서, 기지사용료¹⁷⁾는 물론이거니와 미국군대는 마땅히 군인들은 영내에 제한시켜야할 것이다. 병사들이 제마음대로 군대 담밖으로 나가 주둔국 부녀자를 돈으로 사고 그리고 일년간의 군복무기간 여자를 싼값에 즐기다가, 때론 변태성욕을 발산하다가, 그것도 심증이 나면 마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참혹하게 죽이는 일들을 군지도부와 미국행정부는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성욕을 주체 할 수없는 심심한 젊은 군인들에게 보다 질높은 여가와 문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군법을 강화시키든지 해서 아시아 여성을 넘보는 일을 엄격히 금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미국군인들로부터 유출되는 에이즈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러한 에이즈 문제로 인해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미군기지를 철수시켰다. 철수시 필리핀의 가난한 매춘여성들은 미군들이 뿌리고 간 씨앗, 혼혈아들의 양육비까지 받아내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의 긴 터널을 지나 문민정부를 갖게 되었고 참다운 민주주의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반미는 곧 용공이라는 사슬로 인해 더이상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미군의 범행들로 인해 반미열풍으로 확산된다면 아마도 제일 두려운 것은 미국, 미국군대일 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서서히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반핵운동, 평화운동, 민주운동단체들은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등을 발족시키며 이제 외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우리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치이다. 수치스럽다고 가리고 덮어만 둘 수는 없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가난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어머니, 미국의 아내, 그리고 딸들은 남편과 아들이 그 작은 코리아의 땅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실태를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자신의 아들과 남편이 아시아 작은 나라에 와서 어떻게 생활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수치와 분노의 심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가정이 매춘으로 인해 깨어져서도 안될 것이다.

성범죄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파멸시킨다. 월남전쟁후 베트남 제대군인들은 월남에서 복무하던중 직접 목격했거나 체험했던 잔학행위들로 인해 죄악감에 시달렸다. 침략자로서의 그들의 경험은 그들을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회의식에 찬 인간으로 만들었다. 최근 윤금이를 죽인 가해자 케네스 마클 이병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군산복합체의 최종 피해자일수도 있는 것이다.

성폭력과 매춘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모두의 문제이며, 한미양국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국익과 민족적 감정을 떠나 양국이 서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한다. 아마도 일개 약소국여자의 항변은 워싱턴 건물에 모기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귀를 가지고 지금도 어두운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지금도 당신들이 버리고 간 여섯살난 어린 혼혈소년 잔슨은 어두운 단칸방에서 어머니의 매춘을 지켜보며 살고 있다. 지금도 아빠에게 버림받은 16세의 한 혼혈소년은 아버지를 증오하며 자폐증에 걸려 그 어두운 작은방에 웅크리고 있다. 이들의 눈물, 이들의 증오, 이들의 소망에 누가 귀 기울여 줄 것인가!

민족과 국적, 남성과 여성을 떠나 같은 인간으로서 이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야말로 세계의 참된 평화를 향한 디딤돌이 되지 않겠는가!

12

끝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더이상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행정협정을 평등하게 개정할 것. 둘째, 현재 기지촌에서 피해를 당한 알려지지 않은 여성 등의 사례들을 실태조사하는 여행단 프로그램(EXPOSURE TRIP?)같은 것을 주선하여 직접 조사할 것. 셋째, 현재 국제결혼 하여 미국에 온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인신매매로 넘겨지거나, 부당한 이혼을 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건들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미국내의 한국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를 개설하거나, 현재 있는 단체의 재정지원을 할 것. 다섯째, 현재 혼혈아를 자녀로 둔 한국의 기지촌의 여성들에 대한 부대내 정식취업을 보장할 것. 여섯째, 혼혈아에 대한 것으로 혼혈아들에 대한 이민법을 대폭 개정해 자격제한을 풀 것. 그들이 학교를 마칠수 있고 제대로 양육될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여 실천할 것. 한국내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혼혈아 일세대, 이 세대들을 위한 직업알선을 할 것. 그리고 아빠찾아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것. 일곱째, 미국의 여성운동, 평화운동단체는 한국의 관련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각단체와 연대하여 이를 여론화 시킴으로써 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제안으로서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속에 더욱더 구체화되고 행동화되어 실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저질·퇴폐 물들이는 GI문화

미국의 10대 여가수 티파니의 한국공연이 있었던 89년 5월 20일 저녁 경기도 안양시 공설운동장. 이날 공연장에는 가벼운 옷차림의 10대 청소년 남녀팬들이 공연 한 시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 공연이 임박해서는 넓은 잔디운동장과 스탠드가 1만여명의 청중들로 가득 찼다. 공연에 앞서 운동장에 설치된 가설무대의 초대형 확성기에서 미국의 최신 팝송들이 귀가 따갑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운동장 곳곳에는 '티파니, 사랑해요' '안녕 티파니' 등 영어로 씌어진 플래카드가 내걸려 들뜬 분위기를 연출했다.

눈부신 조명과 함께 불꽃과 폭죽이 터지면서 티파니의 공연이 시작되자 청중들은 일시에 함창하듯 피성을 질러대며 열광했다. 무대 맨앞에 앉아 있던 열성 청소년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양손을 올려 리듬에 따라 손뼉을 치자 뒤편의 청중들도 이에 가세, 거의 모든 청중이 박수를 쳐댔다. 그 모습은 흔히 영화나 TV에서 보는 미국내의 유명팝가수 공연현장과도 흡사했다.

또 일부 소년들은 티파니의 노래가 한 곡씩 끝날 때마다 연두색과 빨간색의 형광막대(플라스틱 막대 안에 형광물질을 넣어 일정시간 빛을 내도록 한 것)를 머리 위로 던지며 환호하는가 하면 '티파니' '티파니'를 연호했다.

친구와 같이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티파니공연을 보러왔다는 김모군(서울K고 1년)은 "방송을 통해서나 듣던 티파니의 실제공연을 보니 가슴이 뒹군다"며 "다이내믹하고 환상적인 공연"이라고 말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에는 술에 취한 듯한 일부 청소년들이 노래에 맞춰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거나 운동장바닥에 그대로 벌렁 드러눕는 등 공연장의 소란은 극에 달했다. 8천원씩의 입장료를 물고 들어와 시종 피성을 지르며 열광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은 서울근교인 안양이 아니라 마치 미국의 어느 팝송 페스티벌의 광적인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처럼 미국의 팝송에 빠져 열광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미국지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어디 팝송뿐인가. 코카콜라 햄버거 블루진 등에서 미적감각 사고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중문화는 이미 우리 생활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린지 오래다.

문화의 특성상 고유한 문화전통을 갖고 있는 한 민족이 다른 외부국가의 문화에 동화되리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반면에 오랜 기간에 걸친 빈번한 문화의 교류·접촉과정에서 외부문화에 일단 길들여질 경우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결과다.

미국의 대중문화는 2차대전 후부터 미국의 국력을 업고 막강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 각국에 스며들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국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미국의 인기가수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 메릴스트립 등 미국 연예계를 주름잡는 인기인들은 미국인들만의 우상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도, 북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통신 교통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촌'으로 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상업주의적 대중문화가 갖는 '세계성'과 '동시성'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문화가 당초 주한미군을 통해 유입됐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 또 일제 36년 동안 일본문화를 강제적 분위기에서 수용하다가 곧바로 미국 대중문화를 접하는 데서 국민들이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한데 심각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방이후 이땅에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하나의 큰 매개체였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된 미국의 대중문화는 엄밀히 말해 전형적인 미국의 대중문화라기보다는 이보다 훨씬 질이 낮은 이른바 '양키문화', 다시 말해 'GI문화'였다.

서울대 강현두교수(신문학)는 "그동안 국내에 전파된 미국문화는 주한미군을 통해 걸러진 'GI문화'가 대부분이며 이 GI문화는 주둔지 미군들을 위한 '위락문화'가 주종을 이뤘다"며 "이 위락문화는 미국의 일반적인 대중문화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주둔군인은 본국주둔보다 훨씬 힘든 상황속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 당연하며 이들을 위한 '위락문화'는 다소 퇴폐적이거나 미국내의 일반적인 도덕기준보다 다소 낮다 하더라도 군인사회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통해 전파된 미국 대중문화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면 인권존중의식 사회봉사정신 합리적인 사고방식 시간관념 질서와 준법정신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통해 유입된 미국문화를 무조건 사갈시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라는 견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일부 저질 미국문화에 동화된 부분에 대해 그 원인이나 책임을 주한미군의 존재에만 돌리는 태도도 옳지 못하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온 우리 자신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어쨌든 미군부대는 한때 각종 포르노필름, 도색잡지의 창구였다. 또다른 저질 양키문화의 한 예로는 각종 영어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들 수 있다. 미군부대 주변에서 흘러나와 10대 청소년들이 자주 입는 이같은 유의 티셔츠속에는 그 의미를 알면 낯뜨거워 입에 담지도 못할 퇴폐적 문구들이 많다. 'Follow Me'란 문구는 '한 번 놀아볼 생각이 있으면 따라오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Wild Baby Shop'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줄 용의가 있으며 어느 남자든 받아들일겠다'는 내용이다. 또 'Junk Food'는 '싸구려 음식'을 뜻하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영어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우리 청소년들이, 일부 대학생들까지도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입고 활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팝송만 해도 그렇다. 여자중고교생들까지도 고전적인 팝송으로 애송하는 'Love Me Tender'의 '러브'가 뜻하는 것은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애무하는 그런 성인 남녀간의 사랑으로 '날 부드럽게 애무해줘요'란 뜻이 된다. 최근 라디오 팝송프로에서 밤낮없이 방송되고 있는 미국 팝송 중에는 그 가사내용이 정말 낯뜨거운 것이 많은데도 우리 청소년들은 그 정확한 뜻도 모른 채 애청·애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티셔츠, 팝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문화는 어느덧 우리의 미적감각까지

도 변화시키고 있다. 성형외과전문의 함기선박사는 성형외과를 찾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 형태가 과거의 한국적 타입에서 점차 서구적 타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함씨는 “한국인의 평균적인 얼굴모습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1.3 정도인데 최근 젊은 여성고객들 중에는 서구인과 같이 1대 1.35의 비율로 얼굴 전체가 약간 길게 성형해주도록 요청해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예쁘다는 미적기준이 과거의 동양적인 기준에서 점차 미국적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식생활의 변화추세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맥도날드 웬디스 버거킹 등 미국의 유명 햄버거 업체들이 이미 국내에 진출, 지난 한해동안 이들 세 회사가 100억원 가량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피자인 피자헛 등 미국의 피자체인도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 외식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들 미국업체의 매출성장률은 해마다 30%를 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특히 최근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한 조사결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외식메뉴로는 햄버거와 피자가 갈비 불고기 등 한식메뉴를 앞지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이미 청소년들의 입맛은 미국식 음식에 길들여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중문화의 동화현상 속에서 문화의 주체성을 찾자는 움직임이 지난 올림픽 개최 이후 활기를 띠고 있고 이에 따른 학자들간의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강수교수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상황은 미국에 의해 사실상 경제 문화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적 제국주의의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 사회학과 김경동교수는 “우리의 문화는 엄연히 문화주체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문화종속 상태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견해”라고 반박하고 “미국으로서는 기지촌문화 등 미군주둔에 의해 비쳐진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오히려 대 한국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일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당국은 “주한미군 영내에서는 음악 연극공연과 전시회 등 건전한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텍사스촌 문화 등 미군

주둔으로 야기된 부정적 측면만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제화시대를 맞아 선진국들의 보다 세련된 문화와 상호교류를 갖는 일은 국제사회 속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상대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선호경향은 우리의 주체의식과 고유 전통문화에 대한 망각과 가치혼란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주체성을 지켜가면서 서구문화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미국 일변도가 아닌 상대국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의 기본적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뜻있는 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미군과 싸우는 한국인 노조

지난 61년이후 계속 미군부대에서 운전사로 일해온 이원구씨(경기 송탄시)는 지난 2월말 자신이 고용돼 있던 주한미공군측으로부터 갑자기 ‘해고예정통고’를 받았다. 이어 3월말 ‘해고결정통고’를 받은 이씨는 평생직장을 잃었다는 생각에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창 때인 스물 네살때부터 미군부대에서 일하기 시작, 지금까지 28년간 단 한번의 견책도 받지 않고 근속해온 이씨였다. 이씨에 대한 해고이유는 ‘과격시위와 불법파업을 선동,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씨가 소속된 ‘전국주한미군노조’ 송탄지부 조합원들은 88년 11월 29일 미공군 측의 한국인고용원 감원계획에 맞서 군산 대구 K2 전남지부 등과 함께 이틀간 시한부파업을 벌인 일이 있었다. 당시 파업은 주한미공군의 건축 수리청부업체로 새로 계약을 맺은 미PAE사가 기존 한국인 고용원 118명에 대해 일방적인 감원통고를 한 데서 촉발됐다.

노조측은 이같은 감원조치가 감원발생시 6개월 전에 노조에 통고하도록 명시돼 있는 단체협약조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10명 이상을 감원할 때는 한국정부에 늦어도 6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인사규정조항도 위반한 불법해고라고 주장, 감원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송탄지부 부지부장직을 맡고 있던 이씨는 기지 정문밖에서 있었던 농성에 노조 간부로서 가담했다가 농성모습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둔 미공군측에 의해 ‘1급주동자’로 찍혀 파업이 끝난지 3개월 뒤에 해고 당한 것이다.

당시의 노사분규는 이틀만에 협상으로 타결됐으나 미공군측은 뒤늦게 이씨를 해고했을 뿐 아니라 미군노조 송탄지부장 이영걸씨를 5일간 정직처분하고 노조임원 60여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했다. 또 농성에 가담한 일반조합원들은 파업기간을 연가(年假)로 대체당해야 했다.

이씨는 당시 미8군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최종결정을 기다렸으나 미공군측의 해고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형편이었다.

주한미군노조통계에 따르면 이씨처럼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돼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88년말 현재 2만 2811명(남자 2만 99명 여자 2712명)에 이른다.

이중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일부 사무직과 비밀취급업무직을 제외한 1만 8975명이 주한미군노조에 가입돼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측과 용역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2만명에 가까워 주한미군이 창출해낸 일자리는 대충 4만자리에 이른다.

이들은 일반단순 노무직에서부터 부대경비 통신시설정비 비행기 미사일정비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240여 직종에서 주한미군 전체업무의 40%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등록서류에는 이들의 사업장명은 ‘주한미군사령부’, 사업의 종류는 ‘주한미군 지원업무’, 고용주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돼 있다.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를 볼때 주한미군은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효성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내의 어느 재벌총수 못지 않게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한국인 근로자수가 이처럼 많은 만큼 미군측과 한국인 근로자 사이에는 일찍부터 노사분규가 적지 않았고 노조결성도 어느 직종보다 빨랐다.

주한미군 노조는 역사가 길다. 또 어느 노조보다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51년 4월 당시 임시수도 부산의 부두하역 검수원들로 노조가 결성된 것이 주한미군 노조의 첫 걸음이었다. 그후 59년 11월 서울에서 5개 지역 직종별 노조대표 40명으로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이 발족됨으로써 처음으로 전국규모의 노조가 됐다.

그러나 작업장이 주한미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노조활동은 항상 제약과 압력을 받아왔다. 이같은 압력은 미군당국과 한국정부 양쪽으로부터 왔다. 노조활동이 한미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끼친다는 명분앞에 근로자들은 위축되곤 했다. 이같은 사정은 노조의 명칭이 ‘전국외국기관 종업원노조’ ‘전국외국기관노조’ ‘외기노조’가맹지부 등으로 자주 바뀐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

요즘은 달라졌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당국은 근로자들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왔다. 이같은 여건에서 61년 노조측은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비파업결의문'을 제출하고서야 미군측으로부터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받게 된다. 노조측은 그후 64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비파업결의문'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함으로써 비로소 유보해왔던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노조는 아직도 다른 일반노조와는 달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미행정협정상의 노무관계 조항에 많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쟁의가 발생하면 한국의 노동부에 조정을 의뢰하게 돼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노조측은 압력과 회유에 의해 단체행동을 포기해왔다는 게 노조측의 이야기. 노동부의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완전히 배제된 채 주한미군측과 한국정부측으로 구성된 '한미합동위원회'로 문제가 넘어간다.

'한미합동위'에 회부된지 70일이 지나도 교섭타결이 안될 경우 노조는 비로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 발동은 쉽지 않다. 한미합동위가 강제조정권을 갖고 있는 데다 노조나 고용원이 합동위의 강제조정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의 승인취소 또는 고용원의 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단체행동권 행사는 거의 봉쇄돼 있는 형편이다.

주한미군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88년말 현재 조합원들의 월평균 임금은 본봉으로 기술직이 48만 2000여원, 사무직은 47만 1000여원.

여기에 보너스 등을 합하면 기술직이 65만 9000여원, 사무직이 63만 5000여원 정도라는 것. 어찌보면 타직장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50세로 20년 이상 근속해 온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노조 간부들의 주장이다.

주한미군측은 해마다 한국정부에서 추천하는 기업체들(88년의 경우 78개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조사한 뒤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의 표본이 되는 한국기업체의 노동자가 대부분 30세 이하이며 여성이 3분의 1이나 되고 평균근속 연수도 3년정도 밖에 안돼 주한미군 노조 조합원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89년 5월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는 미군측의 감원 계획 등으로 찬바람이 불었다. 미군당국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한편 하청업체에 일거리를 맡기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다.

1988년 5월 26일 루이스 메네트리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세출위 방위 소위에 출석, "원화의 평가절상과 한국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한국인 직원을 작년 대비 17%정도 감축할 예정"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같은 감원정책으로 88년말 미군노조 조합원수는 87년말에 비해 1219명이 줄었으며 이같은 추세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노조 송탄지부의 경우 88년 11월까지 1900여명이었던 조합원수가 이듬해 5월 17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영걸지부장은 "현재 34개 노조분회 가운데 조합원이 4~5명 밖에 안되는 곳도 있어 분회수를 30개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노조에는 지역별로 15개의 지부가 있는데 이중 가장 특이한 지부가 '한국노무단'지부다. 'KSC'(Korean Service Corps)로 불리는 이 한국노무단은 서울 동두천 의정부 등 전국 11개 지역에 17개 중대로 편성돼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들의 임무다.

이들 노무단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임무는 '전시'와 '평시'임무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소에는 다른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미군부대에서 갖가지 전문적인 일을 맡고 있으나 전시에는 △야전진지 및 도로건설 유지 △탄약 및 보급품 운송 △사상자 후송 등 세 가지 일을 전담하게 돼 있다.

말하자면 이들 한국노무단 소속 근로자들은 주한미군의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손과 발'로 준전사인 셈. 노조측에 따르면 한국노무단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현재 3500명 정도이나 일단 전시가 되면 그만 2000명 이상으로 인원이 확충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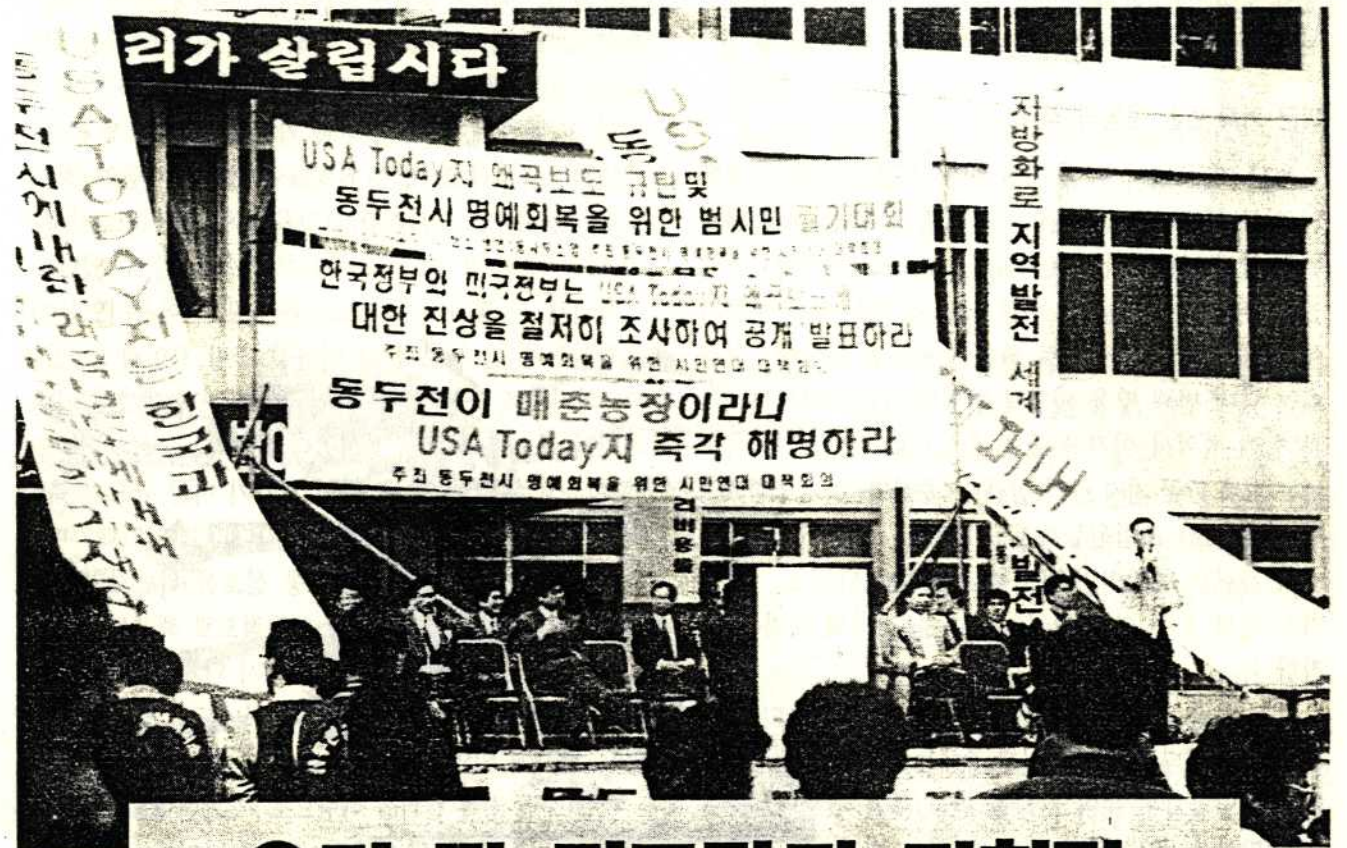
주한미군노조의 짧지 않은 역사에서 이들 한국노무단이 걸어온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6·25전쟁 중에는 한때 15만명에 달했던 한국노무단은 3개 노동사단에 편성돼 일정한 복무기간도 없이 전장을 헤매야 했다고 간부들은 회고한다. 당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이들은 '전몰장병'으로 인정되지도 못했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 말하자면 군번없는 전사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65년 주한미군노조 산하에 한국노무단지부가 결성되고 슬한 진통 끝

에 67년 2월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뒤에야 이들은 비로소 다른 조합원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됐다.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인들과 노사관계로 접촉해왔기 때문인지 이들 사이에는 의외로 반미성향이 강하다.

주한미군노조의 한 간부는 "직접 미국인들과 장기간 접촉해본 사람이 아니면 조합원들의 반미감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 애증의 감정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조합원들이 갖는 반미감정은 학생이나 재야운동권의 반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쨌거나 주한미군부대는 우리의 직장인 것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며 "원만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범국민 운동

김용한 전국연합 미군기지대책위원장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발단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은 지난 1993년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3월 <용산 미군 기지 평택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시민 모임>(약칭 평택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지역 이기주의 차원의 시민 운동이 3년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평택시민모임>은 1989년에 역시 같은 문제로 싸웠던 대전 사람들이 '용산 미군 기지 대전 이전 저지'를 기념하며 계룡산에서 단체 해단식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당

히 분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긴 힘들겠지만 만약에 이긴다면 현재 평택에 있는 두 개의 미군 기지를 돌려 받기 위해 싸우자"는 결의까지 했다. 1993년 7월 국방부의 '용산 미군 기지 지방 이전 유보' 발표를 이끌어낸 <평택시민모임>은 곧바로 평택역 광장에서 '용산 미군 기지 평택 이전 저지 기념 및 미군 기지 반환 촉구를 위한 시민 대회'를 가짐으로써 모임 결성 초기의 결의를 이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얼마 안 있어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은 '용산 미군 기지 이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평택시민모임>과 <서울연합>은 여러 차례 개별 접촉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이 아닌 '반환' 운

동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 접근을 봄으로써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싹이 살아남게 되었다.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경과

용산 미군 기지 평택 이전 반대 투쟁 과정에서 평택의 일부 주민이 미군 기지 때문에 땅과 집을 무려 열세 번씩 강제로 빼앗기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평택시민모임>은 바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 운동을 함께 벌이기로 하고 주민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열네 번째 땅을 빼앗길 뻔했다가 <평택시민모임>과 함께 싸워서 이긴 분들을 중심으로 만났으나, 나중에는 현재 미군 기지 주변 상인과 <주한미군노동조합>(일명 외기노조) 조합원들까지도 만났다. 그래서 미군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고,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미군 기지 때문에 땅을 빼앗기셨던 분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952년 전쟁 중에는 천막과 각목 2개, 양쌀과 양밀가루 두어 포석을 받고 쫓겨 났으며, 나중에는 땅값을 20년 뒤에 찾을 수 있는 채권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 때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땅값이 터무니 없이 싼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고생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미군 부대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의 소음에 항상 시달려야 했고, 미군들이 폐유, 폐수, 골프장 농약,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정화하지 않고 마구 버리기 때문에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마저도 사용하기 힘들게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퇴폐적인 환경 때문에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것은 비단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지 주변 시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다. 여중 3학년 정도만 되면 화장을 하고 미군 클럽에 드나드는 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기지 주변 지역의 현실이다.

미군 기지 주변 상인들은 고객인 미군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미군이 많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기를 바라는 분까지 계셨다. 남북이 긴장되면 될 수록, 판이나 오끼나와, 필리핀 등지에서 미군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었다. 8.18 도끼만행 사건 때가 대표적이었다. 최근의 DMZ 사건 때도 미군이 증강되었고, 그 때마다 경기는 일시적으로나마 좋아지는 게 사

실이였다. 그러나 <평택시민모임>의 활동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던 그 분들과 계속 만나 확인한 결과 그분들도 미군에게 당하고 살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군 범죄를 가장 많이 당하거나 목격하면서도, 그리고 미군 헌병들이 수시로 '영업 정지'(Off-Limit)를 시키거나 그것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확인해 본 결과 <외기노조>는 상당히 어용이었는데, 조합원들을 만나 보자 그 이유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외기노조 조합원들은 퇴직금을 해마다 받고 있었다. 해마다 해고를 당하는 셈이었다. 그리고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원인도 알 수 없이 갑자기 미군 규모가 축소되는데 그 때마다 대량 감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군과 사소하게라도 다투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 부대출입증(일명 패스)을 빼앗겨 자동적으로 해고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혹시 단체행동이라도 하려면, '반미'나 '적색분자'나 하며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런 주민 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민모임>은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내용을 정립해 나가게 된 것이다.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내용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내용은 아직도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정립된 내용도 한꺼번에 정립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그때그때 수정 보완된 것이다.

(1) 미군 기지 임대 기간 설정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핵심 내용은 우선 미군 기지의 임대 기간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미군의 즉각 철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군 기지가 있는 다른 나라들의 예를 참고로 하였다. 첫째, 필리핀은 1947년에 99년을 기한으로 하는 기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1966년 필리핀과 미국은 미군 기지의 임대 기간을 25년으로 갱신하였다. 그 25년이 끝난 1991년 필리핀은 전체의 미군 기지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1988년에 미군 기지 임대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정부가 10년을 연장해 주어 1998년까지로 늦추어진 상태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뒤 5년간의 미군정 기간을 거쳤다. 그 뒤

몇몇 미군 기지와 오끼나와 전체를 뺀 나머지 일본 땅은 일본에게 돌려 주었다. 오끼나와는 그 뒤 계속해서 미군의 수중에 있다가 1972년에는 임대 기간 10년의 미군 기지 몇 개를 빼고는 모두 돌려 받았다. 오끼나와 반환 20주년인 1992년에는 미군 기지의 임대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해 놓았으며, 기지 협상 기간인 지난 해 때

에서는 미군 기지 임대료를 받다가 미군이 떠나 임대료를 못 받게 되자 일부 주민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외신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 자치 단체 재정에서 미군 기지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미군 기지를 싫어하면서도 섣뜻 기지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평택시민모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미군 기지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다 임대료를 징수해서가 아니다.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은 나라에서 1억평이나 되는 땅을 남의 나라군대에게 공짜로 빌려 주는 구조를, 미군 주둔 50년이 넘는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미군 기지 임대료는 시, 군, 구 단위의 지방 자치 단체 재정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군 주둔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바로 시, 군, 구 단위의 기지 주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흥련 출범식에 내걸린 대자보.

마침 국민학교 여학생에 대한 미군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임대 기간 연장 거부 움직임이 범오끼나와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있다.

참고로 1961년에 북한과 옛 소련 사이에 체결된 조-소 군사 조약을 살펴 보면 "본 조약은 10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체결국 일방이 기한 만료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의 '무기한' 부분을 '10년간'으로 고치자는 것이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핵심인 것이다. 임대 기간의 연장 여부와 임대 조건 갱신은 국회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2) 미군 기지 임대료 징수

미군 기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징수하자는 것도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 필리핀

(3) 미군 기지의 평화적 활용 방안 마련

미군 기지는 이제까지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갑자기 폐쇄되었다. 충남 성환, 경기도 파주 용주골, 서울 성동구, 대전, 경북 포항 등지의 미군 기지가 모두 그랬다. 미군이 갑자기 떠나 버리면 기지 주변 상인들은 물론, <외기노조>의 조합원들도 갑자기 생계를 잃게 된다. 기지촌 퇴폐의 상징이던 이른바 '창녀촌'만 썰렁하게 남아 한국인 '고객'을 기다릴 뿐이다. 한 번 형성된 기지촌이 쇠퇴한 채로 그냥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단골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군 기지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보다는 현지 주민들과 상의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1993년 부산친구 의회가 하야리야 부대의 이전을 결의했던 것도 바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유권자들을 만나 본 결과 자신들을 뽑아 준 유권자인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필리핀에서도 미군 기지와 관련한 주민 의견이 보수적인 상원 의원들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일

본 오기나와에서도 현지 주민의 정확한 의견 수렴이 오
따 지사를 받쳐 주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많지 않지만 지역별로 대충
 훑어 보면, 서울 '용산'의 경우 민족 공원과 서민 주택 단
 지, 동두천의 경우 국립대학, 평택의 경우 신공항과 국
 립대학, 대구의 경우 시민 공원과 도로, 부산의 경우 도
 로와 시민 공원 등으로 그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4) 미군 범죄 근절 운동

1993년 10월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 윤금이 씨(당
 시 26세)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1
 년 뒤 마클이 대법원에서 15년 형을 확정 받던 때까지
 마클과 우리 사법 당국이 보인 태도는 많은 국민의 분
 노를 샀다.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마클과, 너
 무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것이었다. 그 뒤 한창렬 씨 택시 강도 사건, 김국혜 씨
 성폭행 사건, 설은주 씨 세 모녀 폭행 감금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마침내 지난 1995년 11월부터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일부 개
 정에 합의하게 되었고 1996년 5월 현재까지 개정 협상
 을 계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실체를 생각할 때 미군 범죄 문제는 지극
 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듯
 하다. '사람 사는 곳에는 범죄가 있게 마련이고, 미군
 이 주둔하는 곳에 미군 범죄가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미
 군 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려면 미군을 철수시켜야지
 겨우 미군 범죄 근절 운동 같은 것을 해 가지고는 실제
 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를
 아는 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이
 미지를 가진 종교계 인사들이 대표를 맡고, 흔들림 없
 는 의식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한 젊은이들이 실무를
 맡아 끈질기게 미군 범죄 근절 운동을 벌여 상당한 성
 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벌이는 <운동 본부>의 '금요시위'는 이미 국
 제 무대에 널리 알려져 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전면 개정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방향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으로 모아져야 한
 다. 조약과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

리도 '무기한으로' 시민 운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
 다고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도 없을 것이다.

조약과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 뿐만
 아니라 차분한 운동도 함께 벌여야 한다. <한미상호방
 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연구 검토, 개정안
 마련, 국민 서명을 통한 국회 청원 등의 과정이 필요하
 다. 지금까지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미주둔군지위
 협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고,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올 6월에 개원하게 되는 15대 국회에 청원할 준
 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청원했다고 해서 미군 기지 반환 운동
 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개정안
 이 정말 평등할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지원을 받
 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이
 후에도 지속적인 압력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번 국회에서 우리의 확실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전
 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
 이 필요하다.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현재 상황

평택에서 시작된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은 지금 전국적
 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평택, 동두천, 의정부, 군산 등
 소도시는 물론, 서울, 부산, 대구 등에까지 번져 있는
 상태이다. 특히 부산과 대구, 동두천 지역에서는 <민주
 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과 <대구경북연합>, <동두천민주
 시민회> 등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
 으며, 서울에서는 <우리 땅 용산 미군 기지 되찾기 서
 울 시민 모임>(가칭)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의 상징인 용산 미군 기지를 되찾기 위
 한 <서울시민모임> 준비모임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
 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그리고 전
 국 각 지역 '우리 땅 미군 기지 되찾기대책위원회' 실
 무자들은 <미군기지 대책반>을 구성해 지난 해부터 전
 국 조직 결성을 위해 10여 차례 전국을 돌며 준비 회
 의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지난 5
 월의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미군기지대책위원회'를 구
 성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인천에서도 부평구에 있는
 캠프마켓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
 는 미군 주둔 51년을 부끄럽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가칭) 전국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사업 계획 (초안)

1. 현시기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의 내용과 성격

1. 왜 '미군 철수'나 '미군기지 이전'이 아닌 미군기지 되찾기(반환)인가?

미군철수 운동은 198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전체 운동의 핵심과제로 인식되었고 또 그렇
 게 실천되어 왔다. 80년대 중반이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미군철수 운동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반미자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군철수 운동은 민족자주화운동의 대중화라는 절박한
 과제를 실현하지 못한 채 전략적 구호를 나열하는 선언적인 선도투쟁에 머물러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조용하여 낮은 차원의 운동에서 높은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운동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못한 데 기인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사회
 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지점이며, '미군철수 문제'는 대북 문제와 더불어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투박하게 말하면 '미군철수'는 '정권 타도'의 구호보다 한차원 높은 구
 호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족자주화 운동의 대중적 토대와 발전정도가 일천하다는 데 있다. 이를 민주와 통
 일 운동과 비교해 보자. 우리 국민들은 수십년동안 독재정권을 반대하며 다양한 대중운동을 통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 왔고 이 과정에서 높은 반독재 민주주의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통일운동
 의 경우 국민대다수가 통일을 바란다는 대중적 토대위에서 88년 이후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반미자주화 운동의 경우

첫째, 국민들 사이에 반미자주의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기는 하나 그 의식수준은
 대부분 본질적인 정치, 군사 문제로까지 발전되지 못한 채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
 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②

③

2. 현시기 미군기지 되찾기(반환)운동의 내용과 성격

원래적 의미의 미군기지 되찾기(반환) 운동은 미군기지를 실제로 돌려받는 것으로 미군 철수
 운동과 차별성이 없다. 그러나 현시기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은 이러한 원래적 의미의 운동보다는
 한 차원 낮은 단계의 운동이다.

현시기 미군기지 되찾기(반환) 운동은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의 권리회복을 중심에 둔 운동이
 다. 여기서 권리회복이란 미군들 마음대로 기지를 사용케 되어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여 미군이
 기지를 사용함에 있어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기한을 정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한미행
 정협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미군기지 사용 계약을 체결케 하는 것이다. 즉 미군은 엄연히 토지
 를 빌려 쓰는 세입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미군이 땅주인 꼴이 되어버린 역
 전된 관계다)

권리회복(계약체결)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 1)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징수,
- 2) 미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대도시에 위치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기지의 반환,
- 3) 전국적인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축소 통폐합을 통한 구조 조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주한미군의 위상정립, 궁극적으로는 민족자주화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전국 공통의 요구사항은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통한 기지사용 계약 체결, 임대기한 설정, 임대기한 징수, 불필요하거나 대도시에 위치한 기지의 반환 등이 될 것이나, 지역 운동의 경우 조건과 역량이 따라 무게중심이 다르게 설정될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운동역량이 있는 지역에서는 실제적인 기지 반환을 중심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고,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미군기지가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기지 반환보다는 임대기한, 임대료 징수를 통한 지역 재정의 충당에 무게 중심이 실릴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임대료 징수의 구호보다는 '기지를 돌려받아 시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구호가 중심과제로 설정되어야 대중운동으로서의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실현 경로는 다음에서 보듯 두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한미행정협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용산 기지 반환 : 원칙적인 방식으로 협정의 전면 개정 되었을 때만이 미군기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그 실현에 있어 상대적인 어려움이 큼
- 2) 한미행정협정을 고치지 않고 협정의 하위개념인 합의각서를 통한 용산 기지 반환 : 한미 양국이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합의했던 것이 바로 '합의각서'를 통한 형식이다. 이것은 한미행정협정 개정이라는 방식보다는 상대적인 가능성이 크나, 전체 미군기지 해결과는 일정 유리되는 부분이 있다.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1)의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통한 반환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기지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는 대중운동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2)의 합의각서 체결 방식이 상대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선의 대안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합의각서 체결로 기지를 반환하는 형식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II. 의의

1. 미군기지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며, 변화된 한미관계에 걸맞는 주한미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운동이다.

미군기지는 비록 미군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빌어쓰고 있을 뿐 엄연히 우리의 땅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한 채 미군당국은 그들의 이해와 이익에 따라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형적인 구조로 증병을 앓고 있는 지역과 시민들의 생활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군기지의 일부라도 활용하려면 미군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국의 미군기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일본, 필리핀 등 타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군은 기지를 사용함에 있어 해당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지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해당국가가 미군기지를 관리, 통제하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유독 우리의 경우만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은 50여년동안 미군기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미군당국에 양도하였던 전도된 상황을 극복하여 우리의 땅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며, 이 운동을 통해 변화된 한미관계에 걸맞는 주한미군의 위상을 '구호'가 아닌 '현실'에서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국토가 제모습을 찾고, 국민들의 복된 삶을 일구는 운동이다.

전국 방방곡곡 요소요소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해 미군주둔 지역은 도로, 교통, 환경, 교육, 문화, 주택, 지역발전 등에서 파행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국토가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방대한 미군기지의 반환과 이용이 필연적이며,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미군기지를 돌려받기 어려운 지역의 각 지자체는 미군기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지역 주민의 복된 삶을 위해 투자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파행적인 지역구조를 쾌적한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실한요구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3. 한미행정협정의 전면 개정에 이바지하는 운동이다.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문제로 한미행정협정(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공론화하였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은 형사재판권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사용,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군의 밀수와 PX 불법유통,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미군부대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등 방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없이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는 주한미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는 시급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드높은 요구가 있는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을 통해 한미행정협정의 굴욕적인 전모를 드러나게 하고 협정을 전면 개정할 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남북긴장과 분단유지의 원인은 세계최대의 군사대결에 있다. 동북아 평화정착에 발맞춰 미군기지를 축소하는 것은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을 정착하는 지름길이다.

5. 민족자주화 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출발이며, 궁극적인 민족자주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조성하는 운동이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는 핵심은 한미간의 불평등한 군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있다. 주한미군의 특권적 주둔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걸맞지 않는 대규모 주둔을 극복함으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낮은 차원의 민족자주화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주한미군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라는 높은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III. 목표

1. 단기적 목표(1996년)

- 1) 주객이 전도된 미군기지 사용의 극복하여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 2) 각 지역과 각계각층의 참여속에 전국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장기적인 운동을 근거를 착실히 다져나간다.
- 3)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을 대중화하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될 미군 공여지 문제에 적극 대처해 광범위한 여론을 조성한다.
-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미군법

최 영역에 머물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미군기지(공여지) 문제로까지 확대해 나간다.

2. 장기적 목표

- 1) 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나 불필요한 미군기지를 돌려받는다.
- 2) 미군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한미간의 계약을 통해 미군기지를 사용케한다. (계약체결, 임대기한 설정, 기지사용료 징수, 기지 반환 및 축소 등)
- 3) 미군기지를 돌려받은 후 기지터가 시민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한다. (대안제시, 건설과정 감시 등)
- 4) 주한미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궁극적인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마련한다.

IV. 계획 (1996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 올해(1996년)의 경우 조직 결성을 중심으로 몇가지 공동과제를 실천하는 수준으로 기초를 설정하고, 보다 강력한 공동 대응은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1. (가칭) 전국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1) 조직 구성의 원칙
각 지역 연대기구(지역별 시민모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망라되어 전국 단위의 부문단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되, 지역 연대기구에 의사결정권 등 무게중심을 둔다.

2) 일정

- 7월 27일(혹은 8월 3일): 대표자회의 및 준비위원회 출범식
- * 출범식 시기, 형태(전국 집중 혹은 동시다발), 인간띠 잇기 등 구체적인 형식 문제 토의 필요
 - * 출범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모임: 1-2차례 필요

2. 간부 및 대중 교양 사업

- *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문제의식을 확보하고, 미군기지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실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집중적인 교양 활동을 벌여나간다.
- * 교양자료: "미군기지 반환 운동 자료집(별지 참조)"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발간한 "한미행정협정 대중 교양 책자", "한미행정협정 전문 연구 자료집",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안" 등
- * 기타자료(운동본부 소장)
 - 1) 비디오 자료: "미군범죄", "한미행정협정", "미군PX불법유출", "미군공여지 문제"
 - 2) 기타: "주요 미군범죄 사례 및 각종 피해 사례", "미군범죄 피해자 사진전"

3. 미군 공여지 실태 파악 및 반환 운동

- 1) 미군 공여지 실태 조사
각 지역별로 지자체 등을 상대로 미군 공여지(특히 사유지가 불법 공여된 땅) 확인 작업을 벌인다. 공여지 실태 공개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에 "각 지자체에 공여지 도면이 배포되어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적극 활용.

- 2) 국방부에 공여지 확인 (민원)편지 보내기 운동
국방부에서 공여지 전체 실태는 공개할 수 없으나 직접 관련자가 문의하면 공여지 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한데에 착안하여, 대중 실천 형식으로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

- 3) (가칭) 미군 공여지 반환을 위한 법률구조 센터 설치
= 각 지역별로 변호사를 영입하여 구조센터를 설치하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가 본부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운동본부에서는 동두천, 파주 등 4건의 공여지 해제 소송 준비 중, 헌법소원 여부도 검토 중)
= 같은 날, 동시다발로 구조 센터를 개설한다(기자회견, 개설식 등의 형태로)
시기는?

4. (가칭) '미군 범죄, 피해 신고센터' 설치

- * 미군범죄 등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상담, 법률구조 등 각종 지원활동을 한다.
- * 과거 기지조성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땅반환 소송을 한다.
- * 신고센터내에 자문변호인단을 둔다.
- * 위의 미군 공여지 반환 법률구조 센터와의 관계? (특화시킬 건지, 단일화 할 것인지)

5.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운동

- *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개정요구로 현재 한미간에 행정협정 개정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측의 완강한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미군기지 사용, 공여지 문제 등은 안전에 조차 상정되지 않은 채 형사권, 노무권 등 극히 일부만을 논의하고 있으며 6월말-7월초에 회담을 재개하여 단기간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짐.

- * 기반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의 대응 문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도는 토의 필요.

6. 청원 및 서명 운동

- * 참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지난해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서명 운동을 통해 받은 서명명부 약 7만명분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안을 6-7월에 청원함.
- * 현재 일부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명운동을 확대하여 하반기 정기국회 청원을 목표로 하여 통일적인 청원 및 서명운동을 벌여나가자. 정기국회 때 동일한 시기에 각 지역의 요구로 청원한다.
- * 명칭: 지역의 기지 반환 요구와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예: 부산의 경우, "하야리아 등 미군기지 반환과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부산시

민서명운동)

* 시기: 서명운동을 총화하여 청원할 시기를 정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전개하자.

7.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 미군부대 개방에 대한 대응

1) 가능한 수준에서 조직하여 미군부대를 직접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미군 PX 불법 판매 및 유출에 관한 대응
미군부대 개방시 민간인들에게 팔 수 없는 미군PX물품을 마구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통일적인 대응을 하자.

3)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조사
녹색연합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 지역에서 토양과 대기의 샘플을 채취하여 녹색연합으로 취합하면, 녹색연합에서 분석, 공동대응.

8. 오키나와 등 국제 연대사업

V. 조직 기구표 및 각 부문의 구성과 역할

■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 경과 보고

< 용산미군기지 현황 >

*기지면적 - 106만평(이중 골프장 9만평 개장)

*규모 - 용산구의 15.9% (서울시 전체면적의 0.57%)

1. 의의

△ 서울이 제모습을 찾고, 시민들의 복된 삶을 일구는 운동이다.

비좁은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광대한 용산미군기지로 인해 서울은 도로·교통·환경·교육·문화·주택·공공시설등에서 파행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수도로써의 서울이 제모습을 갖 추기 위해서는 유일한 활용공간인 기지의 반환과 이용이 필연적이라 하겠다. 또한 이는 파행적인 서울을 쾌적한 수도로 가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드높은 사안이다.

△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는 핵심은 한미간의 불평등한 군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있다. 주한미군의 특권적 주둔과 동북아평화정착에 걸맞지 않는 대규모 주둔을 극복함으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남북긴장과 분단유지의 원인은 세계최대의 군사대결에 있다. 동북아 평화정착에 발맞춰 미군 기지를 축소하는 것은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을 정착하는 지름길이다.

△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는 운동이다.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문제로 행정(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공론화하였다. 이제 계기 별 대응운동의 차원을 발전시켜 일상적이고, 대중의 요구가 있는 우리땅 찾기운동을 통해 불평등한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할 수 있다.

2. 배경

△ 민족의 힘이 축성되어 있다.

부산, 평택, 대구, 동두천, 의정부 등 각 지역에서 우리땅 찾기운동이 시민과 지역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땅 찾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증명하는 것으로 96년까지 반환을 합의한바 있는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서울시민과 의회의 힘으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동북아 평화질서방향을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는 군사대결구조에서 관계개선, 평화정착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에 군사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동북아 새질서 수립의 방향과 자체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군의 특권적이고, 대규모적인 주둔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민족의 평화와 통일, 한국 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과제를 상실하게 된다 하겠다.

3. 내용

1) 용산미군기지 반환, 서울시청이전 등 서울시민을 위한 활용

- 반환시기를 법제화하고 가능한 곳은 우선 반환한다.

- 반환전까지의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임대료는 서울시 복지금으로 활용한다.

- 이를 위해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한다.
-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서울시청사의 용산미군기지터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2) 전국적으로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국과의 계약체결, 임대료납부, 임대기한 설정, 주한미군기지 축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운동 진행

- 미군당국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회복하여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국정부와의 계약을 해결하도록 한다.
- 도심에 위치하여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미군기지는 반환받는다.
- 도심외곽에 있는 미군기지는 임대기한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납부한다. 납부된 임대료는 시민과 도민의 생활을 향상하는데 활용한다.
- 이의 법적인 보장을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행협)을 전면개정한다.
- 주한미군주둔비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료를 징수한다.

(하반기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때와 한미안보연례협의회 시기인 10월과 11월에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3) 일본, 필리핀 등 타국의 주둔사례를 비교연구하고, 국제연대기구 참여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4. 목표 - 용산미군기지를 민족공원으로!

1) 단기적 목표(1996년)

- 용산기지반환의 정당성을 공론화한다.
- 시민모임을 광범하게 구성한다.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이 문제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서울시청이 용산미군기지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기적 목표

- 용산미군기지를 돌려받는다.
- 미군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한미간의 계약을 통해 미군기지를 사용케한다.(기지사용료 징수, 기지 반환 및 축소 등)
- 용산미군기지를 돌려받은 후 기지터가 시민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한다.(대안제시, 건설과정 감시 등)
- 주한미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설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5. 계획

1) (가칭)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모임을 구성한다.

- 현재 준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확장하여 준비위원회를 거쳐 11월경에 구성한다.
- 타 지역모임과 적극 연대하고 공동의 기구를 구성한다.

2) (가칭)'미군기지 진단과 민족적활용방안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월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 (가칭)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모임 산하에 특별기구로 한다.
- 전문적인 연구사업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책임있게 제출한다.
- 환경, 교통, 도시발전, 문화, 여성 등의 주제별로 분과를 설치한다. 각 분과에 연구책임자를 두며 전문영역별로 전문단체에서 연구자를 선임하고 각 주제별로 (격)월 토론회를 진행한다.

3) (가칭)'미군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 과거 기지조성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땅반환 소송을 한다.

-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상담, 법률구조 등 각종 지원활동을 한다.

4)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운동

- 현재 미국측의 완강한 입장으로 형사권, 노무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진전이 없는데, 기지 사용문제 등과 함께 불평등협정을 전면개정하는 요구를 수주에 맞게 진행한다.

5) 설문지, 책자발간사업

- 서울시민대간으로 설문을하여 이후 용산기지 반환운동의 자료로 삼는다.
- 용산과 전국미군기지 백서를 발간한다.
- (가칭)'미군기지 진단과 민족적 활용방안 연구위원회'의 연구성과와 월례토론회의 성과물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연구백서를 발간한다.

6) 對 서울시, 정부사업

- 발족과 아울러 서울시, 서울시의회, 청와대, 국회, 국방부, 외무부, 미군당국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용산기지 되찾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조직한다.

7) 시민 조직화 사업

-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제사회단체 및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의 주체로 서도록 한다.
- 많은 시민들이 '시민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회원제(혹은 후원회원)를 두며, 지속적인 회원 모집 사업을 다양하게 벌어나간다.

8) 용산미군기지 되찾기를 위한 문화제, 시민축전

-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문화제(시민축전)를 준비하여 운동의 저변확대를 꾀해 나간다.
- 형태 : 문화제(시민축전)/열린음악회 등

9) 국제연대

- 일본, 필리핀 등 관련국들간의 국제적인 연대를 꾀하고,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다.

10) 여타 다양한 운동 전개

6. 진행상황

- 1996. 3. 21 : (가칭)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모임 발의단체(이하 준비모임) 1차 실무연석회의

(참여 :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환경운동연합)
⇒의의와 내용·목표 공유, 모임구성 계획, 재정등 논의

- 민주노총, 평화와 동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 결합.

- 1996. 4. 24. : 준비모임 대표자회의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의 의의·목표·사업계획 등 토의,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대토론회 개최 결의, 임시 집행위원장 선출(김용한님-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장 겸 전국연합 미군기지대책위원장)

-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서울민주시민연합,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결합.

- 1996. 7. 1. : 준비모임 대표자회의 및 ⇒준비위원회 발족일정 확정

(가칭)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대토론회 개최

⇒부제 : 용산미군기지 진단과 민족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발제 : 도시계획 및 발전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조명래 단국대 교수), 미군시설과 구역,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용산미군기지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김용한 임시집행위원장)

⇒토론자 : 김기중(변호사), 이용식(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 임체정(국회의원), 지용호(서울시의원), 최종덕(환경과 자연철학 연구소 소장)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사업을 위한 공동제안문 발표

- 1996. 7. 11 : 준비모임 15차 실무연석회의 진행(제주 실무연석회의 개최)

- 1996. 7. 30 : 자체 교양 학교(각 단체 대표자와 실무진)

- 1996. 7. 27 - 8. 3. : 용산구민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사업 진행

- 1996. 8. 3 : (가칭)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모임 준비위원회 발족식

A. 용산 미군 기지가 불러 일으키는 문제

(1) 치욕의 역사, 그 상징 용산 미군 기지

용산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이 군사 보급 기지로 사용한 기록을 갖고 있다. 임오군란(1882) 때는 청군이, 청일전쟁(1894) 때는 일본군이, 러일전쟁(1904) 때는 일본군이 점령하였다. 1905년부터는 일본이 군용지로 징발하여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와 조선총독부 관저를 설치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용산은 미군의 손에 넘어가 미군사고문단과 유엔군 사령부, 미군 사령부 등을 떠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용산 미군 기지의 역사는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역사인 셈이다. 면적도 지난 92년 한국이 미군 폴프장 9만 평을 돌려받기 전까지 1백만 평이 넘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지 51년이 되었다. 게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주둔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서기 660년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외세인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었을 때도, 이른바 '나당연합군'은 16년만에 해체되었다. 5천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을 가장 악랄하게 다루던 일본군조차도 36년만에 물러났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도 있지만,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51년씩이나 주둔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다.

(2) 삶의 터전 박탈 - 미군 기지와 공여지

보상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로 쫓겨난 주민의 한 맺힌 경험담은 기지 주변 어딜 가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미군 기지는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처럼 대부분 도시 한복판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 일제 때 일본군이 진을 쳤던 곳이긴 하지만, 6.25 발발 직후 미군이 새로 주둔하게 된 곳도 많다. 일본군이 진을 쳤던 기지의 옛날 땅임자는 거의 확인할 수 없지만, 1950년대 미군이 조성한 미군 기지는 대부분

옛 땅임자들이 기지 주변에서 살고 있다. 당시에 천막과 각목 두어 개, 양쌀과 밀가루 두어 포를 받은 것이 보상의 전부였다. 70, 80 년대에 들어서 미군 기지를 넓히면서도 토지 값을 20년 짜리 채권으로 보상한 정도였다. 미군 기지로 인한 터전 박탈은 기지 이전이나 확장이라는 형태로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군 기지 만이 아니라, '공여지'로 인한 피해 사례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공여지는 '우리나라가 미군에게 공여한 땅'이라는 뜻인데, 대부분은 미군이 기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군 감축 등으로 인해 현재는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땅도 많다. 텅 빈 기지를 한국군이 지켜 주고 있을 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인 것이다. 문제는 땅임자들도 자신의 땅이 공여지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은 미군 공여지이니 나가라' 하는 미군들의 말 한 마디로 터전을 잃게 된다는 데 있다. 이번에 밝혀져 돌의를 빚자 사격장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동두천시 광암동 쇠목 마을의 경우가 그렇다. 쇠목 마을 주민들은 농사철이 나서도 일을 포기한 채 50일 가까이 천막 농성을 하며 경운기를 미군 부대 정문으로 몰아부치는 과격 시위를 벌인 뒤에야 자기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일만은 간신히 면했다. 동두천에 이어 경기도 파주에서도 공여지 문제가 또 터졌다. 국방부는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미군 공여지의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공여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이다.

그밖에 미군 기지 주변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묵여 사유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것은 말할 것조차 없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짓거나, 늘여 짓거나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도 계약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땅값이 싸서 설사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는 이사갈 곳조차 없다.

용산 미군 기지의 원 땅임자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용산 미군 기지 주변의 사유지도 미군 공여지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

(3) 환경 오염

① 인문 환경 파괴 - 퇴폐 풍조 만연, 각종 범죄와 사고

'환경' 하면 우선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말할 때는 인문 환경의 파괴를 먼저 꼽아야 한다. 이른바 '기지촌'이 형성되어 퇴폐 풍조가 일상화되면 교육적인 분위기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된다. 돈 좀 있고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녀를 중고생 때부터 도회지나 해외로 '유학' 보내는 실정이다.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은 여중생들이 방과후에 화장하고 미군 전용 클럽에 다닌다는 사실에도 '그런 걸 이제야 알았냐'며 별로 놀라지 않는다. AIDS로 대표되는 성문란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문 환경 오염이다.

용산 미군 기지 주변의 이른바 '기지촌'은 어느 기지촌과 별다를 바 없이 퇴폐와 범죄의 온상이다. 주한미군은 문자 그대로 '걸어 다니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느 미군이 어느 곳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전국 96개 미군기지에 흩어져 있는 3만 7천명의 미군 가운데 하루 평균 대여섯 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치고 있다. 1년 평균 2천여건, 미군 주둔 이후 총 11만 여건의 미군 범죄가 발생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뺑소니 등 미군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부도 수표나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미군 헌병이 한국인을 용의자로 체포하여 감금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것은 지독히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도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 재판율은 0.7%밖에 되지 않는다. 배상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주한미군은 또 '걸어 다니는 사고뭉치들'이기도 하다. 교통사고는 물론 사격장이나 폭격 훈련장에서 도 수시로 사고를 친다. 지난 4월 동두천에서처럼 산불을 내서 엉뚱한 사람들이 타 죽게 만들기도 하고, 사격 훈련장에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도 한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서는 공군 전투기 폭격 훈련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집과 건물이 갈라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천정이 내려앉고, 유리창과 항아리가 깨지고 부서지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이밖에 미군 기지 주변에서는 마약과 진정제, 환각제 등 약물 남용도 크게 문제가 된다.

② 자연 환경 파괴 - 수질, 토양, 소음

미군 기지에서는 폐수, 폐유를 하루에도 몇천 톤씩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 냇강은 물론 냇물이나 강, 바다도 마구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PCB,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 비행기 이착륙이나 사격 또는 폭격 소음에 의한 난청, 불면증, 사람과 가축의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여러 곳을 시찰한 뒤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군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 본 결과 미군들은 사람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을 정도이다. 어디 미군들만 살 수 없는 환경이겠는가!

정부에서든 민간 환경 단체에서든 용산 미군 기지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오염 실태를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용산 미군 기지의 경우 다른 미군 기지에 비해 자연 환경 파괴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보존될 수 있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이곳의 환경 오염 상태도 정밀 검사해 보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

(4) 경제 질서 파괴

PX 물품을 빼들려 파는 이른바 '암시장'은 미군 기지 주변의 공공연한 일상 생활이 되다시피했다. '칼로스' 등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이나 '밀러', '버드와이저' 등 맥주 등 품목에 따라서는 미군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의 몇십배까지 팔려나가고 있다. 관세도 물지 않아 엄청나게 싼 PX 물품이 버젓이 일반 시장 상점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용산 미군 기지 PX 에서도 엄청난 물품이 불법으로 빠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속 신분증'이 1천2백만 원까지 호가하며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게 팔리고 있는데, 이것도 PX 물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속 신분증'만 있으면 미8군 골프장 면세품점이나 양식당 등 미군 영내 편의 시설 이용 등 무려 26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당국은 이 "썩"을 소지한 자에게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비싼 외제 가전제품을 시중 가격의 30% 정도 면세 가격으로 팔고 있다.

미군 기지 안에 골프장이 있는 곳은 용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군데이고, 그들이 운영하는 클럽과 양식당은 1백10여 개, 슬롯 머신은 6천여대나 된다. 이런 것을 통해 주한미군이 1994년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액이 무려 2천9백여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슬롯 머신 수익금 가운데 1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미국방부에 송금까지 했다.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 세금을 낼 리 없다.

게다가 전국의 미군 기지에서는 1년에 서너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다. '한미친선축제'나 '독립기념일'(7월 4일)이니 하는 때를 틈타 기지를 한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이런 날은 기지 주변 사람들은 물론 전국에서 물건을 사러 전세 버스까지 동원하여 몰린다. 이러니 '주한미군'이 30대 재벌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별 것 아닐지 모르지만, 미군들은 기지 안팎에서 불법으로 영어 과외까지 하고 있다.

(5) 내정 간섭과 독재 지원

미군 기지 주변 상인들은 소방, 위생, 불법 영업 등 모든 검열을 이중으로 받는다. 우리나라 소방 당국이나 보건 당국, 경찰 당국의 검열 결과를 미군들은 믿지 않는다.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시 검열하여 결과에 따라서는 경고를 거쳐 아예 영업 정지(Off Limit) 처분까지 내린다.

때로는 기지별로 한미친선협회 등을 통해 기지 주둔 지역의 유지급 인사들을 부대 안으로 초청하여 융숭한 대접을 한다. 미군 부대 사령관이나 장성 또는 장교들에게 초청된 것 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으

로 생각하는 '유지'들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긍정적 여론을 확산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정계 뿐 아니라, 재계, 종교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두 포함된다.

용산과 평택의 미군 기지에서는 미군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 각 기관, 각 인물의 집이나 사무실을 도청한다. 유선이건 무선이건 전화는 물론 집이나 사무실 안에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모두 대상이다.

나아가 최근에 비밀 문서를 통해 밝혀진 '광주학살 지원, 목인, 방조' 등과 같이 독재자의 등장에서 정권 이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간여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의 자주 국방을 방해하고 수입 개방을 강요하는 등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것도, 용산 미군 기지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 보란 듯이 '국민적 환영을 받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6) 인권 유린

① 노동자 탄압

미군 기지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 노동조합'(일명 외기노조)에 속해 있다. 그러나 말이 노동조합이지 노동3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외기노조 조합원은 해마다 퇴직금을 받는다. 1년 계약인 셈이다. 특하면 부대출입증(일명 패스)을 빼앗긴다. 교통 신호를 위반하거나 미군과 사소하게라도 다투어 패스를 빼앗기면 즉시 해고나 마찬가지로이다. 직장인 미군 부대에 출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기노조'가 어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② 기지촌 여성 문제 - 사기 결혼과 혼혈아 방지

우리나라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혼혈아를 낳아 기르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종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흑인 혼혈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남편인 미군이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경우 어머니와 자식이 당하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제 결혼에 사기 당하는 경우도 아주 흔한 일이다.

(7) 자주 국방 방해 - 작전권 박탈, 정보력 의존, 미사일 협정 등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군의 전시 군사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평시 작전권을 돌려 받았다고는 하나, 군대는 평시가 아닌 전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한국군은 군사 정보 수집이나 해독을 거의 전적으로 주한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한 한국군의 정보력은 퇴락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사정거리 1백50 km 이상 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다.

(8) 통상 압력 - 쌀, 무기, 자동차, 통신

미국의 통상 압력은 WTO를 통해 이미 구조화되었다. 지난 6월 25일에 한국에 온 캔터 상무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 통상, 정통, 건교 장관, 한국통신 사장 등을 만나 노골적인 통상 압력을 행사했다. 신공항 건설, 발전소 건설, 자동차,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의 관리들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들 절절 맨다. 정부 여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한다.

개방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몇 품목을 제외하면 1997년부터는 쌀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물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 분야는 물론 교육과 통신 분야까지 미국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의 국산품 애용 운동조차 가로막고 있

다. 심지어 납 쇠인 쇠고기와 농약 절인 마늘마저 수입을 강요한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농축수산물의 통관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검역하기 전에 일단 통관부터 시키라는 요구도 한다. 말해 무엇하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보란 듯이 남북을 긴장시키기까지 하는 판국이니!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압력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다. 국방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마찰을 빚을 경우 미국이 흑시라도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나올까봐 지레 겁을 먹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9) 교통 장애

동두천에서 부산까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하나같이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교통 문제이다. 미군 기지가 시내의 교통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로 직선 도로를 내고 싶어도, 아니 기존 도로를 넓히고 싶어도 미군 기지 때문에 늘 막히고 만다. 고가 도로는 물론 지하철조차도 미군 기지를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구부러지게 마련이고, 교통은 그만큼 막히게 마련이다.

① 동작대교를 무용지물로 만든 용산 미군 기지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한 동작대교가 들어가 돈에 비해 별로 쓸모가 없다. 용산 미군 기지를 관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뚝 끊긴 것이다. 그래서 이촌동 쪽이나 반포대교 북단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90 도로 틀어야 한다.

② 지하철 4호선을 구부러뜨린 용산 미군 기지

지하철 4호선도 동작대교를 건넌 뒤 직선으로 용산 미군 기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꺾어 한강로까지 간 다음 서울역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지하철을 이렇게 건설하느라 들어간 재정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③ 남산 3호 터널을 붐비게 만든 용산 미군 기지

강변로나 동작대교, 반포대교를 통해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교통량은 모두 반포대교 북단의 반포로로 집중되는데 이 반포로는 남산 3호 터널로 이어진다. 이렇게 집중된 차량 때문에 3호 터널 입구는 항상 정체를 이룰 뿐 아니라 대중 교통 노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중 교통 수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④ 용산을 들로 갈라 놓은 미군 기지

용산 미군 기지는 용산의 한복판에 있어 용산구를 동과 서로 분리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는 동서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있다. 생활권역과 자치권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교육이나 문화, 교통 등 생활 전반에서 엄청난 불편과 손실을 겪고 있다.

B. 용산 미군 기지 문제의 해결 방안

(1) 임대 기간 설정과 임대료 징수

미군 기지를 돌려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현행 <SOFA> 상태에서 돌려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SOFA>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고쳐서 돌려 받는 방법이다.

우선 <SOFA>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한미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에서 미국이 '이 기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서 '반환'하면, 어떤 미군 기지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반환

한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합의 각서'를 체결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청해서 용산 미군 기지를 돌려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SOFA>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고쳐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미군 기지의 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못을 박는 것이다. 현재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 기간을 10년이나 5년으로 못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947년부터 주둔하기 시작한 필리핀 미군 기지의 임대 기간은 99년이었다. 그러나 19년 지난 1966년에 임대 기간을 25년으로 고쳤다.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 기지 임대 기간 연장안을 거부하여 미군 기지 전체를 돌려 받았다. 1997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 일본 미군 기지의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군 기지의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1998년에 끝나게 되어 있다. 하다못해 영국의 조차지 홍콩도 100년이라는 조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1997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홍콩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조-소 군사조약>도 10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었다.

(2) 시민 운동

① '미군 범죄, 피해 신고와 법률 구조 센터' 개설

미군 기지를 되찾으려면 우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각종 미군 범죄와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항의 시위도 벌이고 법률 구조 활동도 병행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전면 개정 운동

먼저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 나갈 사람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의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얼마나 불평등한지 알 수 있고, 그 불평등한 내용을 알아야 시민 대중에게 다가가 '전면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미군 기지 임대 기간 설정, 임대료 징수, 미군 기지 환경 조사권 확보, 환경 오염시 오염자 부담 원칙 명기, 미군 기지 반환 후 환경 복구 계획 수립, 미군 기지 환경 복구 비용 매년 10%씩 적립, 노동3권 완전 보장, 각종 특혜의 축소나 폐지, SOFA 대상자의 축소, 형사재판권과 민사 청구권 완전 확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SOFA의 개정안은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으며, 이번 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정서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개정 협상은 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경우 국회에서 더 확실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비준 동의를 거부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압력도 행사해야 할 것이다.

■ 우리땅 캠페이지를 되찾자

1. 들어가는 글

- 기지반환운동의 직접적 목표는 물론 기지터의 반환이다. 캠페이지터를 반환받게 되면 춘천시에는 잘 다듬어진 평지(무엇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를 20만평(혹은 40만평)이나 갖게 된다. 이 땅을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 잡아도 5000억에서 1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춘천시의 재정으로 확보되며, 연간 임대료를 2%만 받아도 100억에서 200억원 정도의 금액을 매년 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1년 임대료 100억원이면 건평 100평에 최신시설을 갖춘 탁아소를 짓고 운영하는데 5억원을 잡아도 한해에 20개의 탁아소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다. 1조원의 재원으로 춘천의 경제개발에 투자한다면 시 소유의 첨단공업단지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민주운동의 작은 승리만으로는 우리 민중들이 이렇듯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전개하고자 하는 기지반환운동은 단지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만을 쟁취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민족민주운동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지반환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자주,민주,통일의 온전한 실현을 통해서만 우리 민중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 캠페이지 되찾기운동의 취지

(1) 기지반환운동을 통하여 지역운동의 튼튼한 근거를 마련하자.

지역운동의 튼튼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이면서도 세련된 대중운동 일꾼이 있어야 한다. 우리지역에 대중속 깊이 들어가 대중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대중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련되어 나온 대중호랑이가 많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운동이나 여타 운동을 거쳐 성장한 사람들이라 해도 대중의 생활단위에 직접 들어가 대중을 설득,교양하는 대중정치사업을 수행해온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은, 기간의 우리 운동방식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지반환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대중운동방식을 혁신해 내야 한다. 거리에서 대중을 향하여 구호를 외치는 방식만이 아니라 직접 대중의 생활단위로 찾아다니며 대중들과 담화하고 설득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대중들로부터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대중을 전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정치사업이야말로 우리들을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중운동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지역운동의 튼튼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지역내 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기지반환운동이라는 '당면한 공동실천을 통하여 지역운동단체들간의 신뢰와 동지애에 기초한 조직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지역에는 아직도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인 춘천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지반환운동을 경과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내야할 조직적 성과는 무엇보다도 춘천연합의 건설에 있다. 지역운동의 통일단결의 구심인 춘천연합을 건설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기지반환운동속에 관철시켜 나가자.

지역운동이 튼튼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지역대중들의 정치의식 및 조직화 수준을 비상이 강화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미군기지 반환문제는 지역 대중들의 생활적 요구를 실천하는 운동이면서 민족자주화라는 전민족적 요구=높은 정치적 요구를 담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운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대중의 민족자주의식을 일깨워 가야 한다. 그래야만 이 운동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으며 지역운동의 튼튼한 담보로 되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힐 수 있다.

2) 민족자주화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자

1986년 봄 일단의 학생들이 어깨를 걸고 서울대학교 구내를 돌며 반미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반전반핵 양키고홈"

실로 30여년만에 터져나온 이 구호를 신호로 반미의 무풍지대로 알려져 왔던 한국땅은 반미의 열풍지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이 투쟁이 넘어온 구비구비다다에는 김세진, 이재호, 조성만, 이동수, 남진현 등 수많은 애국청년들의 소중한 피가 뿌려져 있다.

기간의 민족자주화운동은 사실 이와같이 꽃다운 청년들의 피값으로 전진해 왔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도 우리는 민족자주의 위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가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위업의 완성은 각성된 소수의 선도적 투쟁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는 절대다수민중들의 완강한 투쟁없이 스스로 식민지를 포기하는 제국주의를 알지 못한다. 이제 반미는 소수의 투쟁에서 다수의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은 무엇보다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정치구호의 차원에서 진행되던 반미투쟁을 지역대중들의 생활적 요구와 결부시켜 내므로써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폭발적인 대중운동이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운동은 미군범죄나 긴장고조와 같은 계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즉자적인 투쟁을 생활적 요구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은 수준의 민족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목적의식적인 반미투쟁이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지역대중의 대다수를 민족자주화운동의 길로 인도해내어야 한다.

3) 우리청년회의 위신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내자.

기지반환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과제는 이 운동의 성과가 청년회내로 귀결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청년회 자체의 조직강화에 힘써야 한다. 이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중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대중을 믿지 못하는 패배주의적인 대중관을 청산하고 동지의 소중함과 단결의 위력을 직접 확인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민주운동의 미래에 대한 근거없는 패배주의를 완전히 일소해내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하여 다수의 청년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 운동과 정속에서 우리 청년회원들이 수행하는 대중조직화의 최우선 과제를 청년회의 확대에 두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운동과정에서 우리 지역시민들 속에 우리 청년회의 지명도를 높이도록 힘을 쏟자. 우리지역에서 가장 애국적인 집단이 춘천사랑청년회이며 춘천사랑청년회의 회원들은 누구나 애국의 길에 몸바쳐 싸우는 청년들 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

끝으로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청년회 출신의 대중적 지도자를 세워내도록 힘을 쏟자. 대중운동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대중적 지도자를 길러낸다. 또한 지역 대중들이 지지와 성원을 한몸에 받는 대중적 지도자의 존재는 대중운동 발전의 튼튼한 담보이기도 하다. 춘천에서 걸출한 대중운동지도자가 나온다면 그곳이 다른곳이 아니라 우리 청년회가 되도록 하자.

2. 우리지역 지기반환운동의 구체적 목표

1) 단기적 목표(96년)

기지반환운동은 결코 하루 이틀만에 성취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몇해를 두고 완강하게 전개할 때만이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장기전이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우선 주체를 잘 꾸

려 장기전의 든든한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동을 떠밀고 갈 주체인 일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을 잘 벌리고 이 운동의 대중적 근거지인 기지주변 지역 주민들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 올해안에 최소한 우리땅 캠페이지도찾기 춘천시민모임(가칭)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이 조직에 묶어 세우도록 하자.

올해는 또한 기지반환문제를 단일한 범시민적 현안으로 확실히 공론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명운동을 잘 벌여 수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지역의 모든 사회운동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이런 대중적 기세로서 지역 제도정치권의 입장표명을 강제해 낼 필요가 있다. 지역의 명망가들이나 언론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 장기적 목표

이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캠페이지터의 완전한 반환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기지반환만으로 이 운동의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기지반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운동에 발 벗고 나서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 기지가 반환되었다면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지방권력을 민주화 하는 데에로 이끌어야 한다. 우선 반환된 기지터를 활용하는 문제에 시민들의 조직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하며 기지반환운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양심적인 시민세력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지역의 정치적 영도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우리지역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단결의 구심이 될 춘천연합을 건설하여야 하며 지역운동차원에서 여타의 시민운동세력을 망라한 상설적 지역운동조직을 세워낼 필요가 있다.

3. 기지 반환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법

1)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 지역 미군기지 현황에 대한 연구 조사는 필수적이다(기지 면적, 병력, 성격, 환경, 미군범죄, 특혜 등)
- * 기지 주변 주민 및 일반 시민들의 요구와 정서, 의식을 잘 파악해야 한다.
- * 기지 반환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특히 지역 경제, 주민 복지, 도시발전의 관점에서)
- * 운동에 참가하는 주체 모두가 기지 문제만큼은 통계자료를 줄줄이 암기하는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한다. (자료집, 선전문, 토론, 연설 자료의 준비 및 훈련 요구)

2)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직접 발동하는 대중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 * 설문, 서명, 대화 설득 등 대중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 설득된 대중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중 자신의 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일회성 행사나 집회가 아닌 정기적인 행사나 집회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조직한다. (예:미군기지앞 금요 집회)
- * 대중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예:인간 떠잇기, 기지 일주자전거 대회, 심포지움, 문화제)

3) 누구나 쉽게 참가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 운동으로 전개 하여야 한다.

- * 개별 가입 및 단체 가입, 후원회원으로 참여 하는 등 광범위한 대중을 망라하는 시민 모임을 만들자.
- * 민족민주운동 단체만이 아닌 시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단체 등 단결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다 참가 시킨다.
- *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참여를 강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교수, 학자, 법조인, 도시 계획 연구자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4) 96년 기지반환운동 계획(시민모임건설 이전까지)

- * 청년회 일꾼교양(7월 둘째주)-각 소모임별 순회교육)
- * 각 단체별 공동사업 제안(7월 셋째주)
- * 설문교육-기지반환 준비모임 일꾼(7월 셋째주)-모꼬지
- * 기지반환 설문작업(7월 넷째주) 및 발기인 모집
- * 월례강좌-참가단체 모두 참여(7월 넷째주)-기지반환과 한미행협
- * 참가단체 연석회의 (기지반환운동 준비모임구성 결의)-(7월말 8월초)
- * 우리땅 캠페이지 되찾기 및 행협개정청원 서명운동(8월초)
- *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8월 중순)
- * 우리땅 캠페이지터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출범식(9월초)
- * 인간떠잇기, 기지측량, 환경평가, 주례정기집회, 엽서보내기, 리본 혹은 뱃지달기 투쟁기금모금, 신문 투고하기 등 다양한 행사결합

6. 캠페이지를 둘러싼 춘천의 현황

시청에서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춘천 Camp Page의 면적은 20만평이라고 한다. 91년도 민중당의 서명운동 당시의 보고서에서 보면 40만 평이라고 나타나 있다.

춘천지역의 총면적이 17000만평이고 그 중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 즉 대지면적은 200만평 정도인데 미군기지의 면적이 40만평이라고 할 때 춘천지역 총대지면적의 20%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곳에는 93년 한림대학보 자료에 의하면 육군 소속의 헬리콥터 약 6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1개 중대당 약 1-2백명의 미군이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기지내부에는 막사시설과 Club(술집)이 있고 격납고를 쓰이는 건물 몇채가 있으며 그외에 부속시설이 있다. 춘천 Camp Page안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수는 약 25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의 봉급 수준은 100-200만원 사이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들은 시설 보수, 미군군사작전업무수행 등의 일을 하고 있다. Camp Page가 철수하게 되면 전문직 종사자 이외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캠페이지에 종사하는 고용원들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캠페이지가 평생 근무해 온 직장인 것이다. (미군기지 고용원들은 3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들이 많다.)

시민의 의견은 어떤가? 91년 12월 3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중당의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첫째, 경제에 관한 문제로 미군기지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69.67%였으며 나머지는 상관없다, 모르겠다 등으로 나타났고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이 35%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49.66%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저지문화확산이 54.33%로 가장 많았고 아울러 미군들이 군복을 입고 시내에 다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상관없다가 70%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58%, 좋은 영향을 미친

다고 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넷째, 환경 및 보건에 관한 것으로 소음이 54.66%로 가장 많았고 수질오염, 대기오염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건에 관해 AIDS 예방책이 얼마나 마련되고 있는지의 질문에는 모른다가 58%로 나타났다. 시내 한가운데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것에 69.33%가 나쁘다고 답했다.

여섯째, 미군기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82.33%가 답했고 기지 이전 후 공간활용도를 묻는 질문에는 임대주택 건설이 34.71%, 복지시설 22.84%, 문화휴식공간 21.6%로 나타났다.

춘천시민들의 대부분은 미군기지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군기지의 존재는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지 이전 후 공간을 활용하자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 미군기지 이전 후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서민층일수록 임대주택 건설과 공간유치를 원하고 있었고 중산층일수록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유치를 선호했다. 민중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캠프페이지의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다. 춘천에서 40만평이라는 땅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외곽지대도 아닌 시내 한복판에 평평하고 고른 그 부지가 미군기지로 이용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군산미군비행장 반환운동

군산시에서 약 25km 떨어진 옥서면에 자리한 군산 미군 비행장은 미군 700명, 8전술 전투 비행단, F5, F16 등 최첨단 무기를 갖춘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큰 전투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수십만평의 땅에는 비행장부터 격납고, 대규모 운동장, 야구장, 골프장,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군기지 안에는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군산비행장이 있어 시설료를 지불하고 비행장을 사용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번 실시되는 공군훈련은 주민들의 난청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며 바다로 바로 접해 있어 비행장 폐유 및 폐기물 등 인근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나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나 시민 감시등이 철저히 차단되고 성역화 되어 있어 조사하기도 힘들고 하소연 할 때도 없는 실정이다.

군산에서는 89년에 정판용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군을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후 미군의 범죄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 시내에 위치한 영화동 등 미군을 상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상가를 아메리카 타운이라 하여 국가에서 미군기지 옆에다 군락을 만들어 형성해주었다. (국가에서 매춘을 인정해주고 허가해줌) 위의 결과는 미군범죄에 단호히 대처했던 군산시민의 힘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많은 범죄가 사실은 주민과 미군간에 은폐되기도 하고 시내와 많이 떨어져 있어 잘 알려지지 않는 등 군산시민이 실감을 못 느끼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에서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미군범죄근절과 미군기지 반환운동에서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실천해 옮길 것이다.

아메리카 타운내의 미군범죄가 타운이 시내와 떨어져 있고, 미군 비행장이 시내와 떨어져 있다는 것 등이 주민을 설득하는데 좋은 조건만은 아니고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주민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판단하에 조사사업과 이 일을 준비할 사람을 내오는 데 올 사업의 중심내용으로 잡았다.

미군기지의 규모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 아파트 땅 등 공여지문제 기지내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수와 직업 등, 그간 검찰에 보고되어진 미군범죄, 시민들의 마음과 의지, 환경오염실태 등을 주민접촉과 설문조사, 서명 등의 방법으로 조사해 갈 방침이다. 군산시에 있는 지역언론에 상당히 주목되고 있고 민간사회단체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잘 진척되리라 생각된다.

1996년 7월 15일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

6. 세계 여러 나라의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참고 자료)

태평양 연안의 여러 나라에서는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래 미국이 취해 온 대외 군사정책에 대해 정부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5년이나 10년의 기지임대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며, 임대료도 받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2,3년 전부터는 계약 갱신 협의를 하는데, 주로 기지임대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것인가 등을 협의한다. '임대료'는커녕 해마다 30억 달러씩 지원해 가며 미군기지를 붙들어두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 글은 1992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해외기지 없는 세기를 향한 태평양 민중 포럼'에 본인이 직접 참가하여 확인한 내용과 그 자리에 보고된 태평양 지역 몇 나라의 사례를 약간 수정 보완하여 요약한 것이다.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군 기지를 돌려 달라'는 이른바 '미군기지 반환'의 목소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다. 각종 정보 수집이나 미국 국내의 여론 조성을 위해 양심적 미국인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대하는 나라도 많았다. 각 나라의 활동가들이 정보 수집부터 차단 당해 거의 언제나 뒷북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평화 운동가들의 '찰거머리' 같은 집착과 주민의 열성적인 제보에 힘입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도 많다.

<사례 1> 일본 : 오끼나와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을 중심으로

오끼나와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진 일본이 전승국 미국한테 통제로 빼앗겼던 땅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빼앗긴 이 땅을 지난 1972년 5월 일부 미군 기지만 빼고 거의 되찾았다.

1992년은 오끼나와 반환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미일 두 나라 정부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오끼나와 주민들은 이 섬을 완전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에 일본의 육상에서는 거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육상 전투는 오끼나와 전투뿐이었다. 1945년 3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석달 동안 벌어졌던 이 유일한 육상 전투는 오끼나와 주민에게 대단히 잔인했다. 이 당시를 경험한 오끼나와 노인들은 오늘까지도 "강철 태풍"에 비유한다. 당시 일본군은 약 8만명, 미군은 54만 8천명이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의 십자 포화로 오끼나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20만여 명이 죽었다.

오끼나와 현의 마사히데 오파 지사는 '오끼나와 전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써여 있다: "주민들은 적이 조국에 쳐들어 오면 천황의 '무적 군대'가 방어해 주리라고 소박하게 믿고 그렇게 희망했다. '무적 군대'가 최소한 아이들과 노인들만이라도 보호해 주리라고 믿었다. 이 점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방위군'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적의 군대'는 오끼나와에 도착하지 않았고, 지역 방위군이 계속해서

제국 군대에 공중 지원을 요청했으나, 제국 군대가 이 절박한 요청을 일축하는 사이에 연합군이 오끼나와를 초토화시켰다.

제국 군대는 오끼나와를 제외한 주요 섬들, 그러니까 '일본 본토'를 방어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오끼나와를 희생시켰던 것이다. 오끼나와에 미군 기지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전투의 직접적 결과였다. 미국은 이 섬을 점령하자마자 가데나 공항과 요미파 공항을 확장해 미군 기지로 사용했다. 이 두 공항은 모두 본토 공격에 대비해 일본군이 세운 공항이었다. 이 기지는 1952년까지 실시된 미군정과, 군정 뒤 바로 시작되어 1972년까지 계속된 미국 민간 지배를 거쳐 5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보란 듯이 남아 있다.

미군 당국은 미군 기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오끼나와인의 사유 재산과 토지 소유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끼나와 전역에 기지를 구축했다. 수천 명의 주민이 전범자로 체포돼 여러 막사에 억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끼나와인들은 미군들이 군용 불도저를 동원해 집과 학교 등 주요 건물을 마구 부수어도 막을 수가 없었다. 후텐마 공군 기지를 건설할 때는 기노와시 중심지를 모조리 파괴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로도 냉전 상태가 계속되자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오끼나와의 상태도 계속되었다. 특히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 때문에 오끼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결국 1953년 미군은 "토지 징발법"을 선포했고, 많은 오끼나와인들은 나하 시와 요미파 마을을 비롯, 군사 기지 확장 대상이 된 모든 지역에 있는 땅의 재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1972년 일본은 오끼나와를 되찾았다. 그러나 미군의 이익 때문에 이번에도 오끼나

와의 이익은 다시 희생되었다. 미일 두 나라가 재산 반환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이 미국으로 하여금 주일 미군 기지를 폐쇄는커녕 확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오끼나와는 주일 미군의 반 이상이 집중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미군기지 가운데 국유지는 5분의 1뿐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이다. 일본 전지역에는 3만 2천 4백 75 ha(105군데)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2만 4천 2백 39 ha(43군데)가 오끼나와에 있고, 전체 미군 5만명 가운데 3만명 이상이 오끼나와에 있다. 기지에 종사하는 민간인과 군속까지 합치면 오끼나와에는 5만 2천여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다.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가 폐쇄되자, 거기 있던 비행기와 병력이 오끼나와로 이동 배치되기도 했다.

1992년 재산 반환 20주년 기념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동안 미군기지로 임대해 주던 사유지의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때 땅임자 575명이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그들은 자기 땅을 미공군 활주로나 기지가 아니라, 공원이나 오락 시설, 도시 개발, 농경지, 유원지 등으로 전환 개발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결국 오끼나와 일반인의 정서를 적절히 고려해, 기지 철수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선에서 기지협상은 마무리되었다. 1997년에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필리핀처럼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미군기지 3곳은 아예 돌려받았다. 1995년 미군 3명이 일본의 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윤간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전역에서 7만 ~ 9만 명이 오끼나와로 몰려 와 항의 시위를 벌여 미 대통령 클린턴의 사과까지 받아냈다. 집회에 참석

한 이들은 연립 정부의 방침에 대항하며 '기지 철폐', '기지 임대 연장 거부' 등의 구호를 목 놓아 외쳤다.

오끼나와 섬은 해변의 산책길이 유명해 거기에 관광 산업을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상의 해변 산책길의 대부분을 미군 기지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군은 시 중심가에 있는 여러 기지에서도 정기적으로 각종 군사 훈련을 한다. 물론 낙하 훈련도 한다. 이런 훈련을 하다가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해 재산 손실이 빚어지는 일은 흔하며, 주민들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다. 5학년 여자 어린이가 항공기에서 떨어진 트레일러에 맞아 죽은 일도 있고, 실탄이 집과 학교 등 건물을 뚫고 지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미군 당국은 주민들에게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도 훈련은 계속되었고 그에 따른 사고와 "민가 인접 폭격"도 계속되었다.

소음 공해도 1년내내 극심할 수 밖에 없다. 특수 훈련 기간에는 말할 수 없이 극심하다. 일본에서 미일 두 나라가 합동으로 벌이는 군사 훈련으로 1992년에는 "비취 크레스트 '92"라는 훈련이 있었다. '해변의 극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는 주로 미해군이 참여하여, 5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새벽 6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 첫 포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 소리에 놀라 가테나 시 주민들이 깨어나는 시각도 물론 새벽 6시였다.

오끼나와는 한 때 '예의 바르고 평화를 사랑하는 지방'이라는 뜻을 지닌 "수레이노 쿠니"란 이름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제2차세계대전과 그 뒤의 냉전 기류 때문에 이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군사 문화와 군사 기지 냄새가 널리 퍼져 있다. 어느 도시건 어느 마을이건 군사 기지

가 조금이라도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게다가 훈련장으로 지정된 고속도로마다 가시 철조망이 줄을 잇고 있다. 민가가 꼭 들어차 있는 지역에 비행장이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군사 기지들이 민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만큼이나,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주민의 활동도 군사 기지 깊숙히까지 파고들고 있다. 오끼나와에는 53개 지방 자치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의 자치 구역을 비핵평화지대로 선언한 곳이 9개 시, 10개 읍, 12개 마을이나 된다.

또 거의 모든 읍과 지역에서 반핵 운동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핵 운동 단체들은 군대에서 벌어지는 핵 사고를 포함하여 어떤 사건이든 섬 전지역에서 보고받고 있다.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반핵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예컨대 이 지역 활동가들이 세우는 대형 철제 구조물(일명 '아시바')을 볼 수 있다. 활동가들은 2개의 게릴라 전투 훈련 시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훈련 시설과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 훈련 시설 사이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군대가 훈련하는 동안 거기 올라가서 확성기로 "적"의 위치를 알려가며 군사 훈련을 방해할 정도이다.

오끼나와 주민들은 미국 정부 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한테도 똑같이 속아왔다. 결국 지사가 기지 반환 운동에 앞장을 섰다.

1991년 10월 8일 오따 지사는 미군의 사격 훈련을 참관한 뒤 그 지역 모든 학교의 교장과 시장, 주민 대표 등을 만났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한 오따 지사는 일본 주재 미 영사 리처드 크리스텐슨 장군을 불렀다. 그 자리에서 지사는 학생들이 사격 훈련에 관해 쓴 작문을 비롯한 각종 기록을 건네 주며 훈련 중지를 요청했다. 크

리스텐슨 영사는 안전 조치와 소음 방지 등을 약속했으나, 오따 지사는 불발탄과 자연 환경 파괴를 들어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오따 지사는 정부를 거슬러 가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직접 미국을 방문하였다. 오끼나와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며 이 섬을 원주민에게 되돌려 주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몇몇 양심적 관리와 하원 의원들을 만나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93년에는 워싱턴 포스트 지에 미군 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전면 광고를 실기도 했다. 오끼나와 현의 주민이자 자신을 지사로 뽑아준 유권자들이 원하기 때문이었다.

도쿄의 요코다와 아즈기에도 미군 기지가 있다. 도쿄의 요코다 미 공군 기지 건너편 3층 건물 옥상에는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불박이 망원경을 여러 대 설치하여, 누구든 100엔짜리 동전을 넣고 마음대로 미군 기지를 감시하며 촬영도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역시 미군 기지가 있는 항구 도시 요코스카에서는 활동가들이 자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미군 기지를 촬영하고 핵무기 적재 가능성이 있는 미국 선박의 입항을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계절과 날씨에 관계 없이 시내 미군 기지 앞에서 "미군 기지 반환"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벌써 20년 넘게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또 일본은 지금 도쿄의 요코다와 아즈기 가운데 하나를 돌려받아 도쿄 제3국제공항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요코다 미군 기지를 안내했던 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

"유권자들이 미군 기지 반환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군 기지를 돌려받으면, 지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군 기지 임대료 수입이 줄게 되는

데, 그럴 경우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 자리에 무엇을 유치해야 예산 삭감을 메꿀 수 있을 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에 출마해 볼 생각입니다."

<사례 2> 오스트레일리아 :
1998년 미군 기지 임대 기간이 끝난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의 핵무기 체계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에 통신 기지와 첩보 수집 기지를 제공하고, 핵무기 적재 가능한 미전함과 비행기들을 항구나 공항을 통해 들여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스스로 미국방 총성 펜타곤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영토에 자리잡고 있는 미군 시설은 30여개 정도이지만, 주요 기지로는 파인 잭, 너링거, 노쓰웨스트 케이프 등 세 기지를 꼽을 수 있다. 이 기지들은 모두 미국이 핵전쟁이나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기지들이다. 또 이 기지들은 위성요격용 미사일이나 미사일요격용 미사일 생산 등 무기 경쟁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필수적인 기지들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이 애매모호한 "특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수백만 달러씩 지불하고 있다. 이 기지들은 원칙적으로 이른바 C³(명령, 조정, 통신, 첩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988년 말 파인 잭 기지와 너링거 기지의 임대 기

간을 10년 더 연장해 주었다. 워싱턴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은 이것을 가리켜 "오스트레일리아가 능동적으로 미국의 세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는 홍보물을 내기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기지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지들에서 하는 폭넓은 기능에 대해 약간의 지식도 얻었고, 그 기지들에서 정리한 첩보들을 약간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중요한 첩보와 통제 기능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 노쓰 웨스트 케이프 기지가 전시 편제로 편성된 적이 있는데, 그때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의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기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중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공격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또한 '적'들로부터 가로채 얻은 암호 메시지들을 활발히 해석하고 분석하는 파인 잭 기지의 1급 비밀실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전쟁이 터질 경우 이른 시기에 너링거 기지에서 미국에 정보하는 자료를 중계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 자료를 받은 미국이 너링거 기지로 보내는 회신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다. 걸프 전쟁 동안에도 이 미군 기지들은 미국과 미국방 총성 펜타곤의 결정에 따라 사용되었을 뿐, 오스트레일리아는 완전히 쫓겨나 놓은 보릿자루였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는 1998년 미군 기지 반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86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 반기지 운동 연합(AABCC)>이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현재 전국 1백40여 지부 오스트레일리아 최대의 평화 연합체로 성장했다. 이 단체는 파인 잭(1987), 노쓰웨스트 케이프(1988), 너링거(1989) 등을 둘러싼 전국 규모의

미군기지 반환 시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캐벌라, 리치몬드, 워쏘니아, 스미쓰필드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시위들까지도 조직하거나 연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함들이 1990년 8월 처음으로 걸프 지역으로 떠나던 때, 이에 항의하는 단체들도 조직되었다. 이들의 항의는 육상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때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평화 운동 단체들은 중동 평화를 위한 운동도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ABCC>는 무기 매매와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 주둔 주요 미군 기지들이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 이를 허용하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지 임대 협정들은 1998년에 끝나게 되어 있다. 물론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다. 1998년에 실제로 이 기지들을 돌려받으려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3년 전인 1995년에 이를 미국쪽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을 위해서는 1995년이 결정적인 해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지난 1995년 기지 임대 연장 여부를 어떻게 통보했는지 아직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평화 운동가들은 1993년 너링거, 1994년 지역의 여러 기지, 1995년에는 파인 잭 기지에서 임대 기간 연장 거부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사례 3> 필리핀 :

미군 기지 어떻게 돌려 받았나?

1991년 9월 16일은 필리핀의 반핵·반기지 운동이 정치적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둔 날

이다. 이 일은 전통적으로 반핵·반기지 운동이 파고 들지 못하던 곳, 즉 상원에서 이루어졌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필리핀이 미군 기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가? 더구나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보수적이던 필리핀 상원이 어떻게 기지 임대 협정 연장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필리핀의 반핵·반기지 운동가들은 언제나 '핵무기경쟁을 외국군의 간섭이나 약소국 점령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져 왔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태평양 비핵지대화과 독립(NFIP)"운동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정체를 확실히 찾았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흩어져있는 여러 섬들을 수십 년에 걸쳐 물리적, 정치적, 심리적 요새로 바꿔버렸다. 지금 필리핀에 다 리퍼고 누워있는 미군 기지들은 그 동안 필리핀 헌법이나 관습, 이민법, 노동법 등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별천지로 지내 왔다.

그 동안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지들의 역할은 다양했다.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내정 간섭이었다. 그밖에 전시에 대비해 각종 무기를 대기 저장시키는 기지로도 사용돼 왔고, 핵무기 발사 기지, 핵폭격기와 전투기 이착륙 기지 역할도 했으며, 핵무기 장착 항공 모함, 수상함(水上艦), 잠수함 등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 역할도 해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활발한 CI 망을 위한 전진 기지라는 점이다.

미국은 그 동안 필리핀에서 자유 세계와 민주주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지탱해 주는 나라로 추앙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1972년 마르코스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이 필리핀에 심어 놓은 민주 정치 체도를 해체해 버렸을 때 미국에 대한 예

전의 이런 관점은 산산이 부서져 나갔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마르코스를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이 이런 독재자를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왜 지원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1987년에 선출된 대부분의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미국은 군사 원조를 두세 배로 늘려가며 이 비상 계엄 정권을 지원했다. 미국의 이같은 지원에 힘입은 마르코스는 1972년에 6만명이던 자신의 군대를 1985년에 무려 25만명으로 늘릴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이 독재자 마르코스를 지원하자, 그 희생자들인 필리핀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드디어 1984년 베그니노 아키노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미군 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부터 필리핀에서는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87년 2월 2일 필리핀 민중은 마침내 '2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베그니노 아키노 상원 의원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이에 고무된 필리핀 민중들은 투표로 비핵 평화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 헌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반핵 운동과 교육 운동을 벌인 끝에 헌법 규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 "필리핀은 영토를 비핵지대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추구한다. 이것은 국가 이익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비핵지대화 조문이 비준된 처음 몇 달 동안, 비핵에 대한 각성과 비핵 의식이 필리핀 전체에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19개 주, 36개 시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자신들의 영역을 비핵지대로 선포했다. 이처럼 지방 정부들이 공식적으로 비핵지대로 선포함으로써 필리핀 인구의 약 34%가 비핵지대에

살게 되었다. 이 때부터 필리핀의 반핵 운동은 힘을 줄 모르고 펄펄 날아가며, 핵무기의 위협성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주도적인 운동을 벌여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부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핵 주창자들이 모두 미군 기지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반핵 운동가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핵무기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하는 운동으로 족하다는 이른바 '반핵평화론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핵과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지닌 것이 바로 필리핀 주둔 미군 기지이므로 바로 그 미군 기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반기지론자'들이었다. 마침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 두 부류를 하나로 연결시킨 것은 역설적이게도 다름 아닌 바로 미국인들이었다.

그 동안 미 해군이 정기적으로 전술 핵무기들을 필리핀에 실어 날랐으며, 그 핵무기들을 언제나 "전시 대비 무기 저장소"가 있는 대규모 병참 기지에 보관해 왔다는 사실을 필리핀 사람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런데 1947년 99년으로 계약했다가 19년 만인 1966년 25년으로 줄였던 미군 기지 임대 기한은 1991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고 1988년부터는 기간 연장 여부를 협상하게 되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필리핀 민중은 핵무기를 들여오거나 저장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필리핀 사람들은 미군 기지 철수나 반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했고, 그저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거나 핵무기를 들여오지 말라고 요구하는 정도였다. 그 때마다 미국인들은 이를 거부함은 물론 그런 요구를 계속할 경우 핵무기 운반용 선박을 정박시키는 기지나 핵무기 저장 기지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일종의 협박이었다. 미군

기지를 싫어는 하면서도 막상 떠난다면 겁을 먹을 줄 알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 협박은 어느 정도 먹혀들기까지 했다. 아키노 대통령이 어떻게든 미국을 붙들어 두려고 국민을 설득하려 들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필리핀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보수적이던 상원 의원들조차 여론이 무서워 아키노 편을 들 수가 없었다.

드디어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왔다. 피나투보 화산 때문에 클라크 공군 기지는 이미 못 쓰게 되었고, 미국과 필리핀 두 나라 정부는 수빅만 해군 기지의 체류 연장 기한 10년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서명함으로써 수빅만 해군 기지도 곧 끝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마침내 1991년 12월 31일 너무나 불평등한 기지 조약을 필리핀 상원이 거절함으로써 필리핀 주둔 미군의 운명은 끝나게 된 것이다. 결국 필리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서 자기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1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군이 그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완전 철수함으로써 필리핀은 1백년 가까운 외국군 주둔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사례 4> 괌 :
독립 운동과 함께 벌이는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

괌의 원주민 차모루인들과 괌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5백년 동안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 차모루인들이 남의 나라 식민 생활을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 스페인 침략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뒤

를 이어 1898년 미국이 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고, 제2차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침략해 들어 왔다. 지금은 다시 미국 "령(領)"으로 되어 있다. 괌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적 국가 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침략해 들어오기 일쑤였다.

괌에는 1992년 현재 현역 미군이 1만 44명, 미군속이 1만 1천 1백 29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밖에 국방부에 근무하는 민간 미국인 문관도 7천 7백 62명이나 된다.

필리핀 수빅만 해군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 폐쇄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괌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4만 7천 에이커(약 1천 5백만평)가 된다. 미군이 직접 조종하고 있는 이 정도 넓이의 재산은 괌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셈이다. 그밖에 8백여 에이커(약 1백만 평) 정도의 민간인 재산을 둘러싸고 있기도 많다.

대부분의 미군 기지는 그 토지 이용도가 대단히 낮다. 그래서 괌 정부는 민간 항공 수요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총독을 통해 아가나에 있는 미해군 공항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분명히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용도가 낮은 땅을 돌려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 왔다.

괌을 지배하고 있는 미군들은 괌에서 해마다 약 7억달러의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사실을 예로 들며 괌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순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인용하기를 즐기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미군이 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1985년 미국 의회 연구소의 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괌에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허비하는 정부, 다시 말해·

'돈이 많이 드는 정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미군이 괌에 주둔하는 것이 어떤 '적'한테서 괌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 주는 말이다. 1980년대 말 괌의 '민족자결위원회'가 독립 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 헌법 초안은 두 차례의 국민 투표에서 괌 국민 전체의 동의까지 얻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검토'한다는 구실로 10년 가까이 요리조리 뜯어만 보고 있다. 이 헌법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① 차모루 인은 괌에서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차모루 인은 미국과 괌의 관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공평한 새로운 현대의 정치적 지위를 설정할 수 있다.
- ③ 민족 자결은 차모루 인의 고유 권한이다.

그밖에 이민, 무역, 토지, 천연 자원, 의무, 국방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조항도 있고, 당분간은 지금처럼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차모루 인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국제 사회에서 괌의 독립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면하고 인지하게 되었다. 괌의 평화 운동가 론 리베라씨는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 운동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의 존경스러운 정부들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정부들이 유엔 결의문 1514조를 이행하고 지지하고 압력을 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께서 저희를 도와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엔 결의문 1514조는 「식민지 국가와

식민지 국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선언이다. 광은 1946년 유엔이 설립된 때부터 유엔의 '비자치령' 목록에 올랐다. 그 당시 함께 '비자치령' 목록에 올랐던 80개의 다른 영토들은 지금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있고, 아직도 식민 통치 아래 있는 곳은 16개뿐이다. 광은 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자신들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차모루 인들이 벌이는 노력은 처절하다. 특히 그들은 미군 기지들이 도대체 왜 자기 나라에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미군 기지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론 리베라씨는 다음과 같은 수사학으로, 광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 그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기지'는 아니다. 그러나 '외국 기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사례 5> 캐나다 :

"미국에 있는 미군 기지도 반대한다!"

캐나다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냉전이 사라졌다. 그러나 캐나다의 평화를 사랑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그 동안 다루어 왔고, 앞으로도 다루게 될 군사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 국민 가운데는 요즘 들어 국방 예산이 부족해서 낡은 장비를 교체할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인이 보기에 국방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캐나다는 엄청난 자금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캐나다의 국

방 예산 총액은 13조 2천 2백 90억 달러로 절대액에서 세계 11위이고, 나토 동맹국 가운데서는 6위이다.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22억씩 줄어들 전망이다. 유럽에 배치돼 있던 부대와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앞으로 5년 안에 신형 해안 경비정 12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곧 이어 소형 프리깃 구축함 16척, 대형 구축함, 잠수함 6척, 소형 호송용 쾌속정 4척 등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른바 '해안 경비정 계획'의 일환인데, 예산은 4억 5천만 달러나 된다. 이처럼 국방비가 비교적 높은 축에 끼는 캐나다는 무기 수출 분야에서도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상 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쓰는 돈 때문에, 정부 재정도 상당히 모자라고, 유관 기관들한테 끌어모아 평화 분야에 쓸 수 있는 기금도 말라 버렸다. 따라서 평화 운동 단체들과 비무장 운동 단체들의 운영 자금도 모자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냉전 시대는 이미 끝났고 앞으로 전쟁은 안 일어날 텐데 평화 운동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생각을 비롯해, '군사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운동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인식까지 널리 퍼져, 캐나다 평화 운동 분야의 실무진과 활동가들은 몹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 운동 분야에서 계속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같은 시기는 참으로 힘들고 절망적인 시기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일반인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평화 운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경우를 보자. 미국은 캐나다와 맞닿아 있는 알래스카 남동쪽에 새로이 해군 시설을 설치했다. 씨팍(SEAFAC)이라는 이름의 이 새 군

사 기지는, 뱀 운하가 지나는 백 섬에 설치되었다. 미국은 다른 잠수함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채집하여 해독하는 등의 각종 실험을 쉽게 하려고 세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트라이던트 잠수함을 정박시켜 놓겠다고 했다.

이처럼 캐나다의 콧잔등 위에 기지를 신설한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고, 각종 압력을 받은 캐나다 정부는 국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각료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례를 제정했다.

- ① 미국과 영국의 해군 핵추진함이 캐나다 영해를 통과할 수 있고, 지정된 캐나다 항구에 입항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가진 미국과 영국의 배들이 캐나다 영해를 통과하고, 캐나다 항구에 입항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알래스카의 실험 시설(미국 주장)에 있는 덕슨 인트랜스에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캐나다 영해를 잠수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캐나다 양쪽 해안을 따라 지나 다니는 핵함정이 늘어나고 있다. 구약성경의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말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말로 일반화된 '보습'이라는 이름을 붙인 '보습 계획'의 통계 자료를 보면, 1990년에는 핵함의 입항 횟수가 18회였으나 1991년에는 45회로 2.7배나 늘었으며, 1990년에는 핵함의 입항일(캐나다 항구에 핵함이 정박해 있던 날 수)이 67일이었으나, 1991년에는 무려 182일로 2.5 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평화에 대한 도전이

며, 캐나다 국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애호하는 온 세계 인류에 대한 도전이다. 캐나다 국민은 이런 도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두 차례 있었던 브리티시 콜롬비아 투쟁을 살펴 보자.

미국이 알래스카에 씨팍이라는 기지를 설치하자, 캐나다에서는 태풍 같은 저항이 일어났다. 평화 운동가들은 들론 씨팍 기지와 인접해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있는 시와 마을의 여러 위원회를 비롯해 그 지역 원주민, 환경 운동 단체 회원들과 지방의원국회의원들, 지역과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부, 교회 단체, 그리고 캐나다 전역에서 모여 든 평화 운동 단체 등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실질적으로 연합해서 싸웠다. 그 덕분에 이 지역의 미군 기지 반대 투쟁은 캐나다 전국에 걸쳐 각종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잠수함들이 씨팍 기지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길목에 붙어 있는 지역은 하이다과이라는 이름의 큰 섬이다. 이 섬은 하이다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토라고 선언한 섬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섬에서 하이다족이 지역이나 민족을 초월해 자기들과 함께 하는 모든 단체들과 협력을 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저항의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힘입어 여러 평화 운동 단체들도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이밖에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섬 평화 협회(VIPS)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핵함들이 빅토리아와 에스키몰트에 입항하는 문제에 아주 재미있게 접근하고 있다. 이 협회는 지난 1991년 10월 30일 캐나다 정부 내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핵함들이 캐나다 영해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3개항의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정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지금은 연방 법원에 이 조례의 첫 두 조항을 파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 소송에서 이들은 법원이 연방 정부에게, 핵함의 빅토리아 입항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중 환경 차원에서 정밀 재조사하도록 판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물론 캐나다 전체에 엄청난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길 가능성도 꽤 높다. 법원에서 이 사건의 판결을 막연히 미래의 어느 날로 미루어 놓긴 했지만, 이 협회가 제출할 증거들을 놓고 일반 대중 상대 청문회를 연다는 데는 동의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밴쿠버의 시의회에서는 핵문제, 특히 다음의 4가지 위협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평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 ① 에스키멀트에 핵함이 정박하는 문제
- ① 나누스에 자리잡은 캐나다 군부대의 실험과 시험 분야
- ① 알래스카에 새로 설치된 씨팍(SEAFAC)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분야
- ① 미국 워싱턴 주의 한포드 기지에 저장되어 있는 핵에 관한 문제

이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은 시의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아닌 시의회에서 만든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위원회의 결성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 위원회에서 지금 시의회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 보자.

- ①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비핵지대로 선포할 것.

- 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는 위에 제시한 4가지 핵관련 문제들의 위협을 평가할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임명하되, 이 특위에는 정부 단체와 재야 평화 단체의 구성원을 고루 포함시킬 것.
- 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는 핵전쟁을 반대하는 캐나다 물리학자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민이 한포드 기지를 반대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연구하도록 할 것.
- 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는 「국경 지역 오염에 관한 국제 합동 위원회」에 한포드 기지 지역에 관해 공식적으로 제소할 것.
- 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는 트라이던트 잠수함이 밴쿠버 영해를 자주 통과할 경우 발생할 위협에 대해 연방 정부에 압력을 넣어 「환경 영향 평가」를 따로 실시하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요구할 것.
- 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는 미해군 보유 핵과 워싱턴주 한포드 기지 저장 핵 때문에 「어업과 환경」이 얼마나 큰 위협에 처하게 될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는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개발할 것.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평화 운동의 성과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때 냉전이 종식된 뒤라 하더라도 캐나다의 평화 운동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평화를 생각하며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일하려는 활동가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법을 어겨야 할 것이

라는 점 뿐이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평화 운동 단체들의 활동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 단체가 하나로 합치거나 연합을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정부 등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 곳에 부드럽게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군국주의, 원자력, 핵무기 등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위협 요소에 매달려 일해 온 사람들이 냉전이라는 수십년 기간 동안 경험하고 배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기지 관련 한미행정협정 주요 조항 해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간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에서 부분 발취

I.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과정

(1) 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2)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

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3) 구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31조, 3개 문서로 이루어졌다.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정식조약은 전통적인 모든 절차를 거치는 조약 즉, 행정부가 조인하고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고, 약식조약은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이다.

행정협정이 바로 약식조약인데, 행정협정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이 동의없이 체결

관련 자료 | 한미행정협정 해설

결할 수 있는 조약이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측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명하는 것이 옳바르다.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행정협정의 모법(母法)이다.

(6) 변천 과정

①.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협정.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미군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내용으로 된 협정은 1949년 미군의 (일시)철수로 종료되었다.

② 대전 협정(1950. 7. 12)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정식명칭: 주한미국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1950년 7월 12일 체결하게 된다. 이어 1952년 5월 24일에는 한국의 미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마이어협정(정식명칭: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③ 1967년 한미행정협정(1967. 2. 9)

한국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대전협정, 마이어협정에 보장된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계속 회피하였다.

그런데 1950년대에 계속해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범행과 만행으로 한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비로소 미국은 협상에 응하기 시작해 1966년 7월 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협상 과정만 13년(53-66)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협상 체결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군의 월남파병, 한일협정 체결을 관철시켰다.

더구나 19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전의 대전협정이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국제법에서 가장 후진적으로 평가받는 미-이디오피아 협정과 유사한 차용적인 협정이었다.

④ 1991년 한미행정협정(1991. 2. 1)

현행 한미행정협정. 1967년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대대적인 과장선전과 6,70년대를 지배했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인해 주한미군의 수많은 범죄와 탈선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왔다. 그러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의식'의 성장에 따라 미군의 각종 범죄행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한미행정협정은 또다시 도마위에 올라 88년 12월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돼 2년여만인 91년 1월 4일 개정서명 후 2월 1일 발효되었다. 이때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분담금 지원을 관철시켰다.

91년 개정은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인 잔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들을 손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구조를 온전시켰다.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

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 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범죄로 인해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한미양국은 95년 11월말부터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애초 96년 1월까지 개정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시한을 훨씬 넘기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한국정부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개정의 대상과 폭이다. 먼저 대상에 있어서는 형사관할권, 미군기지 환경오염, 노무조항 등 전체 31개 조 중에서 3-4개 조에 머물고 있고, 그 3-4개 조 마저도 몇몇 조항만을 다루고 있다. 96년 상반기 중에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평등 구조의 청산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분 개정'에 머물 전망이다. (100분의 1 개정)

II. 미군 기지 관련 조항 해설

(1). 주객이 전도된 미군기지 사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한국이 요청하고 미국이 수락하는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된다. 제 나라 제 땅을 타인이 빌어 쓰는데 땅 주인은 이를 허용하고 오히려 빌어 쓰는 미군이 이를

허락한다면 도대체 이나라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더구나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않아 우리나라 시설과 구역의 사용목적이 반드시 한반도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외국군이 한 나라에 반세기 가까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군작전지휘권이 우리나라에 있지않고 미군이 보유한 상황(현재 평시 군작전지휘권만 이양된 상태)에서 대단히 위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이 자연스레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는 건 먼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승리함으로써 한국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점, 둘째 1950년 한국전쟁시 남한을 도와 주었다는 점, 셋째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해 전쟁억제력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가지 논리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베푸는 여러가지 특혜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돼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미국의 이익에서 미군의 주둔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조약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한반도의 안전과 관련없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남한의 시설과 구역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남한에서 설령 전쟁을 일으킨다해도 이것은 매우 합법적인 것이다.

(2)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없다
(형식은 '한미간의 협의'
내용은 '미군 마음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1.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1967년 이전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을 별도의 협의절차없이 미군이 그대로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본협정 제2조 1항 (가)에 의하여 미군이 기지를 사용함에 있어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한다'는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미군 기지 등 공여지 조성은 1945-48년 미군정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정 시대에는 미군은 '점령군'의 지위를 가지고 일체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했으며,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그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일시 철수했던 미군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되자 다시 들어왔고, 이때 한국정부로부터 '군작전지휘권'을 포함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면서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 직전까지 미군기지에 관한 한미간의 조약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개인 사유지 등 엄청난 땅을 마구 수용하여 미군 공